

주간 통일정세

2015-38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 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북한인권법 제정 “인도주의 교류 파탄 책동”(9/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생사 확인 의뢰서 교환과 금강산 시설 점검단이 오가는 이 때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조작해보려고 날뛰는 것은 노골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함.
 - 대변인은 “남조선 정상배들의 북한인권법 조작놀음은 북남관계를 차단시켜 동족 사이의 인도주의적 교류와 협력사업마저 파탄시키려는 고의적인 책동”이라며 이는 이산가족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의 뜨거운 민족애와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비난함.
 - 대변인은 지금까지 이산가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은 “미국과 반통일 세력들의 극악한 도발행위 때문이었다”며 “남조선 위정자들이 동족을 모함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북한, ‘북핵시설 파괴 특수부대 편성’ 추진에 “군사적 도발”(9/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우리 육군이 북한의 핵시설을 비롯한 주요 전략적 군사시설 파괴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한 데 대해 24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일촉즉발의 위기를 모면한 정세 흐름에 역행해 북남관계를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공공연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평통은 우리 정부가 “앞에서는 신뢰요, 이산가족 상봉이요 떠들고 뒤에서는 위험천만한 전쟁 흥계”를 꾸미고 있다며 “신뢰구축이니, 평화통일이니 하는 것이 한갓 기만극에 불과하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우리는 북남 고위급 접촉합의가 성실히 이행되자면 북남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거듭 강조했다”며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군사적 대결책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함.

- 북한, '북한인권법안 제정 추진' 연일 비난 공세(9/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는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국회에서 감행되고 있는 북인권법은 북남관계를 또다시 악화와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통일악법”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이어 북한인권법안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부정하고 동족간의 반목과 질시, 대결과 충돌만을 불러오게 될 동족대결법”이라며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여야는 “온 거래의 염원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반공화국 대결악법인 북인권법 조작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촉구함.

- 북한, 박 대통령 유엔연설 비난…“이산가족 상봉 위태”(9/29,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집권자가 밖에 나가 동족을 물고뜯는 온갖 험담을 해대는 못된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동족대결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함.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다 못해 평화통일의 미명하에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공격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용납할수 없는 도발이며 어렵게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를 망쳐놓는 극악한 대결망동”이라며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고함.
 - 그는 “이미 남조선 당국자들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별없이 내뱉는 언행 때문에 값을 툭툭히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했다”며 “지금처럼 대결 악담을 늘어놓는다면 판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임.
 - 그는 “남조선 당국은 운명적 시각에 도발적 언행이 예측할 수 없는 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동족을 무모하게 헐뜯는데 대해 민족 앞에 사과해야 하며 말을 가려서 하는 법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한 로켓 반대 “남북관계에 재난 몰고올 것”(9/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논평에서 남한을 향해 “국제적인 반공화국 대결 소동을 벌리는 것이 북남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몰고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함.

- 신문은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해 “우주의 평화적 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면서 “남조선 당국이 주제넘게 들썩거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함.
 - 핵 개발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항변하면서 “지금도 미국은 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림으로써 조선반도에 항시적인 핵전쟁 위험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대북전단 날리는 하늘 아래서 이산가족 만날 수 있겠나”(9/2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두고 “추악한 뼈라(전단) 장사로 어떻게든 정세 완화 흐름을 악화로 되돌리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한시바빠 매장돼야 할 인간쓰레기들의 망동에 민족의 중대사인 북남관계가 농락당한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어 남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냄.
 - 우리민족끼리는 “동족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고취하는 뼈라장들이 날리는 하늘 아래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북남 당국자들이 어떻게 화기에애하게 마주앉아 관계 개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함.
- 북한 “남한, ‘10월 도발설’ 퍼트리며 우리 전진에 제동”(9/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결탁해 10월 도발설을 퍼트리며 대축전장으로 향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힘찬 전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우리의 위성 발사와 핵 억제력 강화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도 침해할 수도 없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자주적 권리 행사”라고 강조함.
 - 특히 최근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등을 ‘야합’으로 규정하면서 “외세와의 공조는 매국 반역의 길, 망국의 길”이라고 주장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는 남조선 당국이 북남합의 정신에 배치되게 외세와 야합해 반공화국 핵 소동과 인권 모략, 체제통일 책동에 광분하고 있어 심히 흐려지고 있다”고 진단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북한, '북한 송환 희망 탈북녀 김련희씨 송환 촉구'(9/23, 조선의오늘, 우리민족끼리, 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 '조선의오늘'은 23일 탈북녀 김련희(45) 씨가 "4년 전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괴뢰정보원의 마수에 걸려 남조선에 끌려갔다"고 주장하면서 김 씨 송환을 촉구하고 나섬.
 - 우리민족끼리도 23일 "남조선당국은 김련희의 화목한 가정을 인위적으로 갈라놓고 단란하고 행복한 생활을 파괴한 저들의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죄하고 그 주범들을 법정에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함.
 - 김씨는 지난 2011년 6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병을 얻어 치료를 받기 위해 탈북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밀입국했다가 브로커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탈북자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정부측은 일단 김씨가 남한인이 된 이상 북한에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연합뉴스는 설명함.
- 북한 억류 한인 대학생 "대북 적대시 정책 전환해야"(9/25, 조선중앙통신)
 - 5월째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21) 씨가 25일 평양에서 미국과 남한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하얀색 셔츠를 입고 나온 주 씨는 평양 주재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리에서 “서방에서 떠드는 것처럼 이 나라(북한)에 인권문제나 폭압정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함.
- 그는 김일성 주석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제안과 6·15 공동선언을 ‘불변의 지침’이라면서 “미국과 남조선 정부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공화국을 인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함.

■ 북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핵개발에 대한 보복”(9/29, 연합뉴스)

- 남측 7대 종단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29일 북측 5대 종단 협의체인 조선종교인협회와 실무접촉을 갖고 '남북종교인평화대회'의 개최 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KCRP의 한 관계자는 29일 “남북 종교인 모임을 금강산에서 하는 방안을 서로 논의했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다시 실무접촉을 갖고 (장소와 시기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남북 양측이 모두 협의체이기 때문에 내부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남북한 종교인의 공동모임을 하자는데는 의견이 같았다”고 덧붙였다.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9.21)】 우리 국회의 ‘北인권법’ 제정 움직임 관련 ‘북남사이의 화해와 평화의 흐름을 차단하고 파쇼폭압통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공공연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우리(北)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9.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외교·통일부의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핵실험 시사’에 대한 ‘韓美 공조’ 대응 입장 표명을 ‘미국과 反北 핵공조놓음·친미사대 매국행위’라며 이는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의 흐름을 되돌려 세우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9.22, 중앙통신·민주조선)

- ‘南 당국이 말로는 합의이행을 광고하면서 외세공조놓음으로 대화 상대방을 무례하게 자극하고 있다’며 ‘외세의존은 동족대결만 격화시키게 된다’는 주장 속에 ‘자주의 원칙을 견지할 때에만 북남대화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신뢰에 기초한 관계개선도 이루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9.23, 중앙통신·노동신문)

-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대변인 담화(9.24)】 우리 국회의 ‘北인권법’ 제정 움직임 관련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로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며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보다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라고 위협(9.24, 중앙방송·중앙통신)

- 남북의 '8·25 합의' 한 달, '남한에서 여전히 대결소동('북인권법' 제정 추진 등)'을 주장하며 "대결상태 해소는 북남관계 문제해결의 선결과제"라고 '남과 북의 우리민족끼리 입장에서 대결상태 해소 노력' 강조(9.25, 중앙통신·노동신문)
- 對北 전단지 살포 관련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南 당국은 느껴야 한다'며 '진실로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긴장완화분위기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며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당국대화의 전도를 흐려놓는 망동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재차 주장(9.26,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국회의 '北인권법' 제정 움직임 관련 '남조선 국회는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파쇼적 악정과 그에 의해 빚어지는 사회적 악폐에 대해서나 걱정을 해야 한다'며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저들의 반역적인 정체만을 더욱 드러내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비난(9.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공군의 KF-16 전투기에 정밀유도폭탄 '스파이스 2000' 도입 계획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의지를 의심케 하는 엄중한 사태'라며 '북남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행위는 파국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비난(9.27, 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대통령과 당국자들의 '北, 미사일 발사·핵실험시사'에 '한미 공조' 대응 표명에 대해 "우리(北)의 자주적 권리행사를 시비질하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에 백해무익하다"고 비난(9.28,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한 당국의 '김련희 송환 요구 목살·차단'은 "추악한 반인권적 정체를 세계면전에 날날이 드러내놓은 것"이라며 '즉시 송환' 再촉구(9.28, 중앙통신·노동신문)
- 남한 민간단체의 對北 전단 살포는 "북남관계 개선에 장애를 조성하고 대화를 부정하는 행위로 될 뿐"이라며 '남한 당국의 책임 통감 및 즉각 중지' 주장(9.28, 평양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유엔 북한인권토론회 맹비난...“제도전복 모략”(9/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적대 세력들이 유엔 인권 무대를 반공화국 인권 모략 마당으로 악용하면서 국제적 압박 공조를 합리화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2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에 맞장구치면서 특정한 나라를 겨냥한 압박 공간으로 이용”됐다고 “공정성과 엄정 중립의 원칙에 의혹과 우려”를 표시함.
 - 또 토론회에서 “동맹 관계를 위해서라면 특정한 나라의 주권 침해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에 편승하는 일본과 EU 나라들의 치졸한 모습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함.

- 북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핵개발에 대한 보복”(9/28, 연합뉴스)
 -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지난 25일 유엔이 17개 개발목표를 채택한 것은 세계적 빈곤을 해결하고 지속적 개발을 위해 국제사회가 들여 온 노력의 산물”이라며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그는 이어 “이번에 채택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평화롭고 지속적인 개발 환경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정 국가에 가해지는 경제 제재는 지속적인 발전을 막고 개발도상국의 자주적 개발에 역행한다”고 주장함.
 - 그는 경제 제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북한 제재를 들며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유보 요청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데 따라 미국이 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리 외무상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심으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유럽 난민위기, 미국 주도 전쟁 때문”(9/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피난민 사태의 장본인은 미국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오늘과 같은 인도주의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고 비판함.
 - 신문은 “2001년 반테러전 명목으로 개시된 미국 주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일으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현대판 피난민 문제의 주요한 발화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합법적인 주권 국가들을 붕괴시키고 인간살육 만행을 감행한 미국이야말로 최대의 ‘인권유린왕초’”라며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함.
- 북한 “미국의 핵폐기 대북정책은 수명다한 폐기품”(9/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논평에서 핵 폐기와 관련한 미국의 대북정책을 “시대착오적인 정책”, “수명을 다한 폐기품”이라며 핵개발 고수 입장을 분명히 밝힘.
 - 논평은 역사적으로도 “조선전쟁에서의 패배와 그후에도 빈번히 가져다바친 항복서들, 우리의 핵억제력 보유 등 미국이 얻은 것은 저들 스스로를 악몽 속에 허덕이게 하는 엄청난 결과들뿐이었다”고 주장함.
 - 논평은 나아가 “특히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다 대응해줄 수 있게

장성강화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은 제국주의 우두머리의 침략정책을 최종적으로 더는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놓았다”고 강조함.

- 북한, 박근혜 방미 앞두고 미국 비난 수위 높여(9/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6면 ‘여지없이 드러난 반통일원흉의 정체’란 사설에서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킨 장본인으로서 북남 대결국면에 대해 응당 책임을 느끼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통일을 방해하는 도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면서 남조선당국을 부추겨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남관계문제에 제멋대로 간섭하면서 잔치상에 재를 뿌리는 미국의 날강도적인 처사를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고 경고함.

다. 회담 관련

- 北 풍계리 핵실험장 실험준비 징후 안보여...7일자 위성사진 판독(9/21, 38노스)
 -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시사로 인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7일 촬영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위성사진 판독에선 핵실험 준비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북한 전문웹사이트 ‘38노스’가 21일 밝힘.
 - 지난 2009년과 2013년 핵실험이 이뤄진 서쪽 갯도 입구에선 올해 초 이후 지금까지 특별한 활동이 눈에 띄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른 갯도를 파느라 생긴 흙더미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갯도 굴착이 완료됐거나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38노스는 분석함.
- 러 전문가 “북한 2020년까지 핵무기 50개까지 개발 가능”(9/21, 연합뉴스)
 - 북한이 2020년까지 보유핵무기 수를 50개까지 늘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이를 탑재할 수 있는 2대의 잠수함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모스크바의 유력 군사전문가인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독립국가연합(CIS: 옛 소련국가 모임) 연구소’ 과장이 21일(현지시간)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 위성관제소 서방언론에 첫 공개…“로켓발사 임박했다”(9/23, CNN)
 - 미국 CNN방송은 취재 허가를 받아 북한의 새 위성관제종합지휘소의 외관과 과학자들의 인터뷰를 담은 뉴스를 23일 보도함.
 - 현광일 NADA 과학개발국장은 인터뷰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여러 부분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더 미더운 기반에서 더 나은 위성을 운반하기 위해 발사 장소를 고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성을 우주로 내보낼 통제 체계는 완성했다”며 “그리고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중요한 통제 작업도 거의 마무리에 이르렀다”고 덧붙임.
 - 현광일 국장은 이어 로켓 발사에 정치·군사적 노림수가 있다는 관측에 대해 “위성 발사는 협상용이 아니며, 외교적 지렛대로 여겨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함.

- 38노스 “풍계리서 새로운 움직임…4차핵실험 준비 가능성도”(9/25, 38노스)
 - ‘38노스’는 지난 18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핵실험장 내 서쪽 갱도와 남쪽 갱도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발견됐다고 24일(현지시간) 밝힘.
 - 38노스는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겨냥해 4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새로운 움직임이 어떤 목적인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며 “이것은 보수유지 활동에서부터 4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함.
 - 38노스는 우선 2차와 3차 핵실험이 실시됐던 서쪽 갱도의 경우 새로 굴착된 터널 입구에 4개의 대형차량이 나란히 주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쪽 갱도로 이어지는 경비대의 보안점검소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의 차량이 발견됐다고 밝힘.

라. 대미국

- 북한, 미 국무장관 ‘다른 수단 모색’ 언급에 “자살 행위”(9/2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1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위협을 끝내기 위해 경제 제재 이상의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다른 수단’이 “혹시 군사적 수단 같은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것은 더욱 어리석고 가소로운 망상”이라며 “그것은 미국의 종말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위협함.
 - 이어 “우리에게 미국이라는 악의 제국을 지구 상에서 없애버릴 무서운 힘이

있다”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을 걷어치울 용단을 내리지 않는 한 미국의 괴로운 ‘모색’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함.

- 미국 “대북 경제제재, 주민 아닌 정권 겨냥한 것”(9/29, 미국의소리)
 - 애나 리치-앨런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2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대북제재의 대상은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 리치-앨런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비핵화 정책을 갖고 있을 뿐”이라며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와 정책 및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는 “북한도 2005년 이런 목표에 서명했다”며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상기시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은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를 유예해야 한다”며 “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함.
 - 그는 “북한 지도부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비핵화를 이행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얻을지 아니면 현재의 경로를 고집해 외교적 고립과 경제 상황 악화에 직면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北, 일본인유골 반환 대가로 日에 1천억 원 요구”(9/23, 아사히신문)
 -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일본과의 비공식 협상 과정에서 일본인 유골 약 8천 위(位)를 발굴하기 위한 묘지 조사와 발굴 경비 등 명목으로 1위당 120만 엔씩 총 100억 엔 상당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자국민 납치 문제가 우선이라며 북한의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해왔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함.
 - 또 북한 측은 북일합의에 따라 작년 7월 납치 문제 재조사를 진행했지만 일본이 공식적으로 납북자로 규정한 12명(이미 일본으로 귀환한 사람 제외) 이하 공인

납북자) 중 ‘8명은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입국하지 않았다’는 종전 입장을 뒤집지 않았다고 신문은 소개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북한 리수용, 뉴욕서 라울 카스트로 등 각국 수반 만나(9/28, 조선중앙통신)
 -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쿠바 등 각국 수반들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통신은 28일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엔 총회 제70차 회의에 참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이 여러나라 국가수반들을 만났다”고 전함.
 - 통신은 리 외무상이 25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만나 담화를 나눴으며, 남아프리카 대통령, 레소토 수상, 이란 외무상과도 만났다고 밝혔으며 이밖에 볼리비아 대통령, 모잠비크 대통령, 독일 총리, 피지 수상, 네팔 부수상, 앙골라·알제리·몽골·카자흐스탄·스웨덴·튀니지 외무상과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유엔 CTBTO, 북한 핵실험 금지 논의…북한 서명 촉구(9/29,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9일 토머스 뫼젤부르크 CTBTO 대변인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30여개국 총리,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핵실험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뫼젤부르크 대변인은 “유엔 사무총장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고위대표, 주요 국가 외교 수반이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북한 핵실험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최근 열린 유럽연합 회의에서도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면서 “유엔 회의에서도 북한이 핵실험 강행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월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이임 주북 인도 대사(아제이 쿠마르 샤르마)와 담화(9.2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9월 21일 '유엔총회 제70차 회의' 참가 차 평양 출발(9.21, 중앙통신·중앙방송)
- 영국 레이버당 출신 국회 상원의원(네일 포비스 데이비드슨)과 일행, 9월 21일 원산육아원·애육원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등 참관(9.21, 중앙통신)
- 미국의 인권실태 폭로(백인경찰의 흑인사살 등 총기류 범죄사건) 및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인권폐해지대, 인권말살국"이라며 '미국의 인권보고서 발간 등 인권재판관 행세' 비난(9.22, 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 인터넷 잡지 <복스> 글 인용, "지금껏 미국이 조선에서 한 짓들은 평화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인간살육과 파괴, 약탈행위뿐"이라고 '사죄·배상 및 주한미군 철수' 촉구(9.22, 중앙통신·민주조선)
- 영국 내이버당 출신 국회 상원 의원(네일 포비스 데이비드슨)과 일행 및 재일본조선인 오사카부 체육협회 대표단·「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9월 22일 평양 출발(9.22,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계' 공약 관련 '세계도처에 방대한 핵무기를 전개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세계의 비핵화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며 '다른 나라들을 기만하는 정치 광고에 불과하다'고 비난(9.23, 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안보법안' 참의원 본회의 통과 관련 '안보법안은 군사적 해외침략을 합법화하는 전쟁법'이라며 '안보법안을 정식 법으로 성립시킨 것은 세계를 제패하려던 제국시대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하자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고 비난(9.24, 중앙통신·노동신문/제2의 패망이 기다린다)
- 제70차 유엔총회 참가 北 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9월 23일 미국뉴욕 도착(9.24,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9월 24일 '기네비사우 선포' 42주년을 즈음하여 同國 대통령(호세 마리오 바즈)에게 축전(9.24, 중앙통신·중앙방송)
- 주북 외교단, 9월 24일 1116호농장 참관(9.24, 중앙통신·중앙방송)
- 불가리아 주재 北 대사 차견일 임명, 최고인민회의 상임족 '정령' 발표(9.25,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9월 24일 留任 이집트 외무상(사미흐 슈크리)에게 축전(9.25, 중앙통신)
- 日 '안보보장관련법' 채택 관련 '재침에로 나가기 위한 전쟁법,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놓은 악법'이라고 지속 비난하며 '군사대국화책동이 자멸의 길을

-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9.26, 중앙통신)
- 北미사일위협에 대비한 日방위성의 개량형 요격미사일 대량생산준비 착수 결정 관련 '저들의 군사대국화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사일위협에 대해 목청을 돋구어대고 있다'며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난(9.26, 중앙통신·노동신문)
 - '세계 도처의 미군기지들은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제압하기 위한 침략의 전초기지,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암적 존재'라며 '주한미군 주둔도 방어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조선정책과 세계 제패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9.29, 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3. 대내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군사생활품 품평회장 시찰...김여정 수행(9/2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수공업부문 생활필수품 품평회장을 둘러보고 "갖가지 질 좋은 생활필수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시기 위하여 군수공업부문 생활필수품 품평회를 의의있게 조직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고 보도함.
 - 시찰에는 노동당 비서인 최룡해와 김양건, 리일환 당 부장, 김춘섭 국방위원회 위원, 조춘룡 제2경제(군수산업)위원장, 조용원 당 부부장 등이 수행했으며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지난 8월20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들이 어떤 제품들을 좋아하는가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생산에 힘을 쏟으라"고 지시하는 한편, "질 좋은 생활필수품들이 상점마다 꼭 차넘치게 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면서 "생활필수품 생산과 관련한 문제를 직접 풀어주고 적극 도와주겠으니 해당 부문에서는 이 사업을 통이 크게 작전하고 대담하게 밀고나가라"고 주문함.
- 북한 김정은, 신축이전 백화점 시찰...“내달 10일 개점하라”(9/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양 “미래과학자거리에 새로 일떠선(건설된) 창광상점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함.

- 시찰에는 노동당 비서인 최룡해와 김양건, 리일환 당 부장, 조용원 당 부부장, 홍영철 기계공업부(군수공업 관장) 부부장,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 등이 수행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상점을 둘러보고 “창광상점의 매장들마다에 우리 군수공업부문의 노동계급들이 만든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들이 꼭 차있고, 상품 진열도 잘했고 분위기가 정말 좋다”면서 만족감을 나타내며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떨구지 않고(떨어지지 않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상점의 일꾼들은 인민들이 어떤 상품들을 좋아하고 어떤 제품들이 수요가 높은가를 제때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고 주문함.
- 북한 김정은, 전체 주민에 월급 100% ‘특별 격려금’ 지급(9/2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조선노동당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전체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들, 연금·보조금·장학금을 받는 모든 대상들에게 월 기준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금을 수여한다”고 보도함.
 - 연합뉴스는 이에 따라 특별 격려금은 군인과 현재 직장을 다니는 주민은 물론 대학생 그리고 은퇴자와 무직자까지 고등학생 이하를 제외한 모든 성인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 당국이 전체 주민과 군인들에게 월급을 기준으로 특별 격려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정권 수립 이래 처음이라고 덧붙임.
 - 통신은 이 결정이 지난 23일 발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른 것이며 특별 격려금 지급이 “당에 드리는 충정의 노력적 선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 북한 김정은, 새로 건조한 대동강 유람선 ‘무지개호’ 시찰(9/2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건조돼 평양 대동강에 새로 띄워진 유람선 ‘무지개호’를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가 새로 건조한 종합방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봤다”며 “김정은 동지는 여러차례 설계를 지도해주고 건조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몸소 풀어줬을 뿐 아니라 배의 이름도 지어줬다”고 전함.
 - 이번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김양건·오수용 당 비서, 조용원 당 부부장, 홍영철 기계공업부(군수공업 담당) 부부장,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항일빨치산’ 리정인 사망…김정은 화환(9/28,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구체적인 사망일시는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은 동지가 항일혁명투사 리정인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며 28일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보도함.
 - 리정인은 일제강점기에 김일성 주석, 그의 아내 김정숙 등과 함께 항일 운동을 했던 '혁명 1세대'로 김일성 훈장과 김정일 훈장, 노력영웅 칭호 등을 받았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김정은 ‘민생 행보’ 부각하며 우상화 박차(9/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의 품이 있다’는 글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홍수 피해가 발생한 나선시를 현지지도한 데 대해 “온 나라를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함.
 - 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려는 불타는 염원”, “인민을 자신의 살붙이로, 하늘로 여기시며”,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하시느” 등 다양한 미사여구를 동원해 찬양함.
 - 노동신문은 또 ‘태풍을 이겨낸 군민 대단결의 이야기’ 기사에서 2012년 태풍으로 평안남도 개천시가 큰 피해를 봤으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로 복구된 것을 언급하며 다음 달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이전에 나선시 복구를 끝낼 것을 강조함.

- 김정은 黨 제1비서, 9월 22일 리순녀(女,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산업동 거주)에게 '100살 생일상' 전달(9.22, 중앙통신)
- 나선시 일꾼-근로자들, 9월 21일 나선시 선종지구에서 김용진(내각 부총리)·권성호(국가건설감독상)·강영수(도시경영상)·림경만(나선시黨 책임비서/보고) 등 참가한 가운데 '김정은 현지 지시 관철' 궐기모임 진행(9.22, 중앙방송)
- 대동강TV수상기공장 창립 40주년 기념보고회, 9월 21일 최태복(黨 비서/'黨 축하문' 전달)·김재성(전자공업상)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9.22, 중앙방송)
- 김정숙(김정은 祖母) 사망(9.22) 66주기 즈음 9월 22일 대성산혁명열사릉 '김정숙 동상'에 헌화, 최룡해·로두철·우당위원장·당·무력·정권기관·내각·근로단체·성·중앙기관 일꾼 등 참가(9.22,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남도 신천군·안악군·은천군 농사실태 현지 요해 및 "가을걷이를 적기에 와닥닥 해제끼기 위한 문제들" 토의(9.25,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일성의 평양 곡산공장 현지지도 및 공장 창립 70년' 기념보고회, 9월 24일 현지 진행 및 김수길(평양시 黨 책임비서) 등 참가(9.25, 중앙방송)
- '조선노동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70년 세월의 나날은 인민의 운명을 간직하고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여 온 성스러운 행로였다'며 '영도자를 따라 곧바로 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는 우리 당은 만민이 영원히 안겨 살아야 할 위대한 어머니'라고 강조(9.26,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父子 동상 제막식, 9월 25일 양강도 혜산시에서 진행(9.26,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김영남·박봉주 등 당과 국가·군대의 책임일꾼들, 9월 27일 추석을 맞이하여 대성산혁명열사릉과 신미리아국열사릉·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 화환 진정(9.27,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무분별한 외자유치에 경계심...“경제특구로 제한”(9/28, 연합뉴스7/30, 경제연구)
 - 북한은 경제학술 계간지 '경제연구' 3호(7월30일 발행)에 '합영, 합작 대상 선정 사업에서 견지해야 할 주요 원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어 무분별한 외자유치에 경계심을 드러냈다고 28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논문은 “지난 시기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 옳은 원칙과 구체적 계획 없이 외국 투자를 받아들인 결과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비정상히 높아지는 현상이 초래됐다”고 지적함.
 - 논문은 “자체로 능히 할 수 있는 것도 무턱대고 다른 나라의 투자를 끌어들이

합영, 합작을 하려는 편향을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가능한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 상품광고 필요성 인정…“인민 위한 봉사활동”(9/29, 연합뉴스; 2015년 3호, 경제연구)
 -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 2015년 3호에는 북한이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상품 광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논문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광고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이 실렸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함.
 - 논문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광고를 잘 하는 것은 인민들의 늘어나는 물질문화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상품판매를 촉진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함.
 - 논문은 상품광고에 대해 “상품을 기동성 있게 소개해 상품 수요를 형성 발전시키고, 상품의 판매형식과 방법을 소개선전해 근로자들의 구매 편의를 도모하며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 봉사활동”이라고 주장함.

나. 주요 조치

- 북한, 전국 지하자원 본격 탐사…중·러도 뛰어드나(9/21, 조선의오늘)
 - ‘조선의오늘’은 21일 “국가자원개발부문의 지질탐사대원들의 노력투쟁에 의하여 여러 대상의 탄광, 광산개발 후보지를 마련하기 위한 세부탐사작업이 종합분석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면서 “세부탐사 결과가 확정되면 무연탄, 초무연탄, 연, 아연광, 자철광, 희토류광 등 새로운 유용광물 매장지들에서 탄광, 광산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된다”고 함.
 - 구체적으로는 평안남도 덕천시 남덕지구에서 추가적인 무연탄 매장지를 찾기 위한 지질탐사작업이 펼쳐졌으며 조선의오늘은 “각 지질탐사대의 탐사대원들은 수천척 지하막장에 여러 대의 시추기를 이동전개하여 탐사속도를 부쩍 높임으로써 짧은 기간에 이 지구의 탐사구간에서 시추작업을 기본적으로 끝내었다”고 설명함.
- 북한, 외국기업가 대상 경제개발구 투자설명회 열어(9/28,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8일 “9월21일 제11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온 여러 나라 기업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화국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관련한

- 투자설명회가 평양 고려호텔에서 진행됐다”고 전함.
- 투자설명회에서는 김천일 조선경제개발협회 서기장이 경제개발구의 특징과 투자자 대상 특혜, 개발 전망 등을 소개하고 투자를 독려함.
 - 김 서기장은 세금 우대와 토지 50년 임대 등 경제개발구 투자 기업에 주는 특혜를 설명하면서 “경제개발구 개발을 위해 들어오는 외국 투자가들에게는 입출국과 거주, 통신, 수출입 등 지대 밖에서보다 훨씬 편리하고 우대적인 환경과 조건이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함.

다. 경제 상황

- “2015회계연도 북한 식량 부족량 전년보다 6만7천톤 늘어”(9/28, 연합뉴스)
 - 28일 통일부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의 북한 식량 수요량은 548만9천t인데 비해 생산량은 508만2천t으로 추정됨.
 - FAO와 WFP가 사용하는 식량회계연도는 전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로 이에 따라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2013회계연도 58만6천t에서 2014회계연도에 34만t으로 줄었다가 2015회계연도에 40만7천t으로 전년보다 6만7천t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 “北, 외교관에 100만弗씩 조달 할당…노동당 70년 행사비”(9/29, 산케이신문)
 -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위해 외교관들에게 거액의 외화 조달을 지시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9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다음 달 10일 예정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소속 외교관에게 1인당 최소 미화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9천400만원)의 외화를 용자받도록 할당량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됨.
 - 정찰총국의 재외 공작원에게는 이달까지 1인당 미화 20만 달러를 상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미납자는 모가지’라는 압박 때문에 본업인 첩보 활동보다 외화 벌이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함.
 - 수해 복구를 명목으로 성인 1인당 2천원(북한 원화로 추정)이나 작업용 장갑 등 현물을 내게 하고 있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김일성·김정일 부장의 동상 건설에 주민을 동원하는 사례도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설명함.

- 또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를 상대로 창건 70주년 기념식 참석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1인당 참가비 약 일본 화폐 30만 엔(한화 약 296만원) 외에 통행료 등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어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신문은 덧붙임.

라. 대외 경제 관계

- ‘북한 소비시장 잡아라’…싱가포르 등 외국기업들 ‘눈독’(9/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이번 전람회에 동남아와 유럽 기업이 참가를 늘렸으며 특히 식료품회사 8곳이 처음 참가하는 등 싱가포르 기업의 관심이 커졌다고 전함.
 - 싱가포르식품생산자협회 원링한씨는 조선신보에 “이번에 출품한 모든 회사들이 조선 시장의 높은 경제적 잠재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조선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함.
 - 신보는 또 “최근 몇해동안 전람회에는 국내기업 참가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에는 외국기업의 참가율이 전체 참가기업의 약 70%였는데 이번 전람회에서는 총 300여개 참가 기업 중 절반 이상의 국내 기업”이라고 밝힘.
- 압록강대교 철로 한때 파손…오후 늦게 열차운행 재개(9/28, 연합뉴스)
 - 28일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을 연결하는 압록강대교 위에서 대형 트럭 1대가 오른쪽 옆으로 넘어지면서 철로 일부가 파손됨.
 - 중국 당국은 압록강대교 차량용 도로의 노후화로 당초 내달 1일 수리 및 보수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나 이날 사고를 계기로 일정을 앞당겼으며 도로 수리·보수작업은 내달 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알려짐.
 - 북중 교역사정에 밝은 단둥의 한 소식통은 “원자재에서 일상생활용품까지 다양한 물자가 압록강대교를 통해 북한으로 수출되는데 화물열차 운행이 정상화됐더라도 트럭, 승합차를 통한 교역이 당분간 끊긴다면 교역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함.

- 독일 민간단체 “북한에 소아외과 의술 전수”(9/29,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 민간구호단체 캡 아나무르가 북한에 소아외과 의학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캡 아나무르 관계자는 “내년도 북한 사업을 위해 내달 북한을 방문한다”며 “독일 하노버대학 의과대학의 소아외과팀이 북한 의사를 대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하노버대학 마틴 라커 박사는 “캡 아나무르가 추진하는 의료 기술 훈련을 위한 사전 답사 형식으로 지난 봄 북한을 방문했었다”며 “북한은 수십 년간 국제사회와 의료 기술 교류를 하지 않아 어린이 수술 지식이나 신생아 수술 이후 중환자실 치료 등이 기초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함.
 - 그는 특히 “신생아 기형을 진단·치료하는 기술을 전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린이용 외과 수술에 필요한 의료 기기 지원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힘.

- 홍건도간석지 건설장에서 9월 21일 ‘40만산 대발파 성과적 진행(9.22, 중앙방송)
- 수풍발전소 창립(‘45.9.24) 70주년 기념보고회, 9월 23일 현지에서 진행(9.24, 중앙방송)
- 전국 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 성과발표회, 9월 23일과 24일 천성청년탄광에서 진행(9.24, 중앙통신)
- 온실남새 재배기술강습(北 대외문화연락위와 주북 폴란드 대사관 공동주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평양대외문화교류소에서 진행(9.24, 중앙통신)
- ‘평양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했던 여러 나라와 지역 대표단들, 9월 26일 평양 출발(9.26, 중앙통신·중앙방송)
- 평안남도 청천강화력발전소 일꾼 등, 나선시 홍수피해 주민들에게 ‘의류·가정용품·식료품 등 10여종의 10만점 물자’ 지원(9.28, 중앙방송)
- 국가과학원 동력연구소에서 “건축물의 장식 및 국부조명에 집초형레드조명체계 도입, 밤거리 장식을 이채롭게 하고 있다”고 선전(9.28,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해외여행 자유 수준 최하위급…무비자 허용 44개국(9/23,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3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인용해 북한 여권을 가진 여행자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는 44개국에 불과하다고 보도함.
 - 북한 주민들의 무비자 방문 가능국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이집트, 모잠비크, 토고, 탄자니아, 우간다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2013년 39개국, 지난해 42개국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 영국 국제교류 관련 법률회사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올릭 트릭스 대변인은 “유엔 회원국 국민이 평균적으로 97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지만 북한은 여기에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함.
- 세계은행 “북한 통치구조 세계 최악 수준”(9/24,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은행이 북한의 언론자유와 법치 등 전반적인 통치구조 수준을 세계 최악으로 평가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세계은행은 30여 개 국제기구 및 감시단체가 세계 230개국의 통치, 법치,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종합해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를 내놓았는데 한은 여기서 내란 등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규제의 공정성, 행정 능력, 언론자유, 부패 통제, 법치 등 6개 중 5개 분야에서 하위 10%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고 방송은 전함.

- '北 창건'(9.9) 기념 여자 1급 축구경기 결승경기, 9월 19일 진행 및 4.25팀 우승(9.21, 중앙통신)
- 대성산혁명열사릉 김정숙(김정은 祖母) 동상, 지난 30년간 4,000만 명의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해외동포들·외국인들 방문(9.21, 중앙통신)
- 北 정금화·변윤애 선수, '제9차 아시아 교예체조선수권대회'(중국, 9.17~19) 에서 금메달 획득(9.21, 중앙통신)
- 北,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체계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9.23, 중앙통신)
- [세계 해사의 날(9.25)] 즈음 北 국가해사감독국 중앙해상환경보호조정소의 '선박 오염물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실천적 계획' 작성과 국제환경보호단체들과 협조' 선언(9.25, 중앙통신)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中, 9·19공동성명 10주년 계기 ‘북핵 세미나’ 개최(9/14, 연합뉴스)
 - 중국은 최근 6자회담 당사국들에 오는 18일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9·19 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6자회담 당사국들을 베이징 (北京)으로 초청해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민관에서 북핵문제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연다고 공지함.
 -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소는 9·19공동성명 8주년인 지난 2013년 9월에도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북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음. 그러나 2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각국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의 회의 참석을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세미나는 9·19공동성명 10주년을 계기로 회담 재개를 위한 실마리를 찾아보겠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된 의도로 읽히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즈음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을 겨냥한 행보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됨.

- 美 국무부,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9/15, 연합뉴스)
 - 존 커비 美 국무부 대변인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커비 대변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실험을 유예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여러 개 나와있다.”고 강조함.
 - 커비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할 경우 이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보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임.

- 중국, 北 위협 겨냥 “긴장 조성 행위 말라”(9/15,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데 이어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데 대해 “긴장 조성행위를 하지 말라”며 비판적 입장을 밝힘.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요구받자 “우리는 유관국(북한)이 신중한 행동을 함으로써 한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또한, 그는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의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마땅히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함. 이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다면 한·미·일은 물론 중국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됨.

- 日 정부, 北미사일발사, 위성이라 불려도 안보리 결의위반(9/15, 연합뉴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탄도미사일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돼 있다.”며 “위성이라고 칭하고 발사하는 경우라도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는 명확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함.
 - 또한, 그는 “미국이나 한국과 확실히 연대하면서 북한에 대해 도발적 행동의 자성, 또 그에 관한 안보리 결의나 6자 회담 공동선언을 존중하도록 촉구하고 싶다.”고 강조함.
 - 한편, 북한은 14일 공개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의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며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함.

- 美 연구기관, 북한, 수소폭탄원료 획득 시도 가능성(9/16, 연합뉴스)
 -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수소폭탄의 원료 중 하나인 3중수소를 획득하고자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 정책연구기관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15일(현지시간) 영변 핵시설의 최신 위성사진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5MW급 원자로에 “북한 기술진이 방사선 조사

채널(irradiation channel)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방사성동위원소의 후보들 중 하나가 3중수소”라고 지적함.

- ISIS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원자력연구원장’ 직함을 가진 이가 출연해 2013년에 나왔던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의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MW 흑연감속로의 용도가 조절 변경되었으며 재정비되어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는 발언을 상기한 데 대해 “북한의 소형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함.

■ 美, 북한에 “무책임한 도발 삼가라…핵보유국 인정 못해”(9/16,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예고에 이어 영변 핵시설 가동을 비롯한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삼가라.”고 압박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시설 가동 주장 등에 관한 언론 보도를 접해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은 무책임한 도발을 중단하고 대신 국제사회의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입장, 특히 역내 주요국을 포함한 세계의 동맹국과 공유하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가 북한에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언행도 삼가도록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고 강조함.
- 앞서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퇴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MW 흑연감속로가 정상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힘.

나. 미·북 관계

■ 美 전문가들, 북한, 다음 달 사이버 도발 가능성 있다(9/15, 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사이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경고함.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이 연구소의 사이버 전문가인

- 스콧 라포이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사이버 작전: 전략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미국 워싱턴 D.C. CSIS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나와 이같이 밝힘.
- 차 석좌는 “다음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 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지만 다른 도발을 피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물리적 수단 이외에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라포이 연구원도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피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며 “목표물이 어떤 것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은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美 동아태 차관보, 북한 또다시 도발하면 실수될 것(9/16, 연합뉴스)

-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우드로윌슨 센터에서 ‘현대차-KF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 연구센터’와 동아시아 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3회 한미대화에 참석하여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이 국제적 제재로 이어지는 위협·도발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북한에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함.
- 러셀 차관보는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어떤 형태의 탄도미사일 활동도 금지돼 있다.”고 밝힘. 또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적으로 하는 9·19 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 협상의 재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함.
- 이어, 그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시한 경로이자 북한이 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고 현실적 안보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도 이 같은 공통의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함.

■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 김정은, 비핵화에 관심 없는 게 최대 문제(9/16, 연합뉴스)

- 9·19 공동성명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국대사는 15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게 최대 문제”라며 “이는 이란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 9·19 공동성명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로서 6자회담 수석 대표를 맡았던 힐 전 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한 합의사항을 공식 부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또한, 힐 전 대사는 “아버지 김정일은 매우 어려운 상대였으나 비핵화 과정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정은 정권의 경우에는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은 9·19 공동성명의 약속을 다시 확약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목적으로 한 대화에 나설 신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케리, 북핵 위협 끝내려면 “경제제재 이상 필요할 수도”(9/17,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끝내기 위해서는 경제제재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수단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밝힘.
 - AP통신 등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이날 마이테 은코아나 마사바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은 제대로 된 경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이러한 케리 장관의 언급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10월 10일)을 앞두고 최근 장거리 로켓에 이어 핵실험 카드까지 꺼내들자 나온 것으로, 만약의 사태 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됨.
-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 지지 미국 내 여론 눈에 띄게 하락(9/17, 연합뉴스)
 - 미국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CCGA)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17일까지 전국 성인 2천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국민의 외교정책 관련 의식 조사보고서를 16일(현지시간)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미국 정부 지도자들이 북한 지도자들과 만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69%였음. 이는 탈레반(53%)과 하마스(56%)보다는 높지만, 쿠바(79%)와 이란(76%)보다는 낮은 수준임.
 - 특히 7년 전인 2008년 양국 지도자들의 만남을 지지하는 비율이 82%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1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이 같은 흐름은 북한 핵문제가 장기 공전하면서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피로감이 크게 확대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풀이하고 있음.
- 트럼프 이번엔 북한 향해 “미치광이가 핵사용 위협”(9/17,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16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근교 시미밸리의 로널드 레이건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이란 핵문제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장거리 로켓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미치광이(maniac)”라고 비판함.
- 트럼프 후보는 우선 “이란 핵 합의는 끔찍하고 무능력한 것”이라며 “내가 지금까지 봤던 최악의 계약 가운데 하나”라고 혹평하며, 느닷없이 “누구도 미치광이가 앉아서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과 두세 곳의 다른 지역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 특히 북한이 그렇다.”고 강조함.
 - 이 같은 발언으로 봤을 때 트럼프 후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비정상적으로 인식하면서 모종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북한, 미국 남북관계 개선 흐름 휘방(9/17, 연합뉴스)

- 북한은 17일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 흐름에 미국이 휘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 하면서 남한을 향해 미국을 배제할 것을 촉구함.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최근 북남 사이에 적십자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 준비가 예정대로 추진되는 등 긍정적인 진전이 이룩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함. 대변인은 이어 “북남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공동보도문 이행을 공공연히 방해해 나선 미국의 비열한 책동은 지금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임.
- 대변인은 “미국은 북남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북남관계에서 일관하게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언급하며, 남한을 향해 “미국의 압력에 눌리워 자주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면 북남 사이에 아무리 좋은 합의가 이룩되어도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

■ 루비오, 북한 김정은 향해 “핵무기 수십 개 가진 미치광이”(9/19,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들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에 이어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향해 “미치광이”라고 묘사함.
- 18일(현지시간) 미국 녹취록 전문서비스인 FNS에 따르면 루비오 의원은 지난 1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열린 미국 공화당 대선경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수십 개의 핵무기와 지금 우리가 서있는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를 의미)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로켓을 가진 미치광이(lunatic)가 북한에 있다.”고 밝혔음.

-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후보를 ‘외교 문외한’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관계 현안에 해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나왔음. 이는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미국 공화당 내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북한, 핵무기 사용 여부, 미국 행동에 달려있다(9/19, 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자신들의 핵무기 사용 여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위협하며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의 핵무기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선 민족의 안전을 지켜내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핵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 구태여 언급한다면 그 모든 것은 미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고 위협함.
- 또한, 북한은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질량적으로 장성 강화됐다.”며 “전문가들은 미국의 그 어떤 요격미사일로도 불규칙적인 비행을 하며 기만 탄두까지 사용하는 우리의 탄도미사일을 명중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비평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1962년부터 중국으로 기울어…美 CIA 대통령 정보보고(9/20, 연합뉴스)

- 북한이 1962년을 기점으로 소련과 멀어지고 중국 측에 확연히 기울었다는 당시 미국 정부의 판단이 공개됨.
- 이달 16일(현지시간) 기밀해제로 일반에 공개된 1961~1969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 일일 정보보고 문건에는 중-소 분쟁에서 한동안 ‘줄타기’를 하던 북한이 친중 노선으로 선회하는 과정이 포함돼 있음.
- 11월 27일 보고서는 “우리는 중-소 분쟁에서 어느 쪽 편을 드는 것을 피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 온 북한이 이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첫 표시들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함. 또한, 바로 다음날 보고서에는 “조선(Korea·여기서는 북한을 가리킴)은 우리가 어제 시사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중국 편을 드는 쪽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일성은 흐루시초프에 대한 개인적 공격을 했다.”고 전함.

- 성김, 평양이든 어디든 북한과 대화 용의 있다(9/20, 연합뉴스)
 - 성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9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평양이든 다른 곳이든 장소는 중요치 않다.”고 밝힘.
 -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맡은 김 대표는 9·19 공동성명 10주년을 맞아 연합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출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고 언급함.
 -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어서 북한 측의 반응이 주목됨.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앞으로 방북 형식의 북·미 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사뭇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북중, 국경도시 잇는 다리 공동건설…경제교류 훈풍 불까(9/15,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의 남양-도문(투먼·圖們) 새 국경 다리의 공동 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15일 평양에서 체결됐다.”고 보도함.
 - 협정식에는 박명국 북한 외무성 부상과 리진권(李進軍)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참석했음. 북한이 근래 들어 중국과의 경제 협력사업을 보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특히 이번 협정은 지난 7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한 이후 체결된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음.
 - 지린성 일대 도시들은 북한-중국-러시아-몽골 4국의 경제 협력 중심지임. 이에 따라 ‘중국통’이었던 장성택 전 부위원장이 그동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다 현재 담보 상태를 보이는 나선·황금평 특구 개발사업을 비롯해 양국 정부 간 경제 협력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며 꺾끄러운 북중 관계를 해소하는 데 촉매제가 될 지 주목됨.
- 중국, 북한 수해복구 지원나서…“대북 화해 메시지”(9/16,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6일 평양발 기사에서 중국 홍십자회(적십자사)가 전날

북한의 홍수피해 복구에 써 달라며 10만 달러(약 1억1천700만 원)의 기부금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함.

- 중국이 공개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은 약 3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가 출범한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짐. 중국 홍십자회는 2012년 1월 북한에 30만 위안(약 5천400만 원) 상당의 라면을 지원했으며 2007년과 2010년에도 수해복구용 물자 등을 지원한 적이 있음.
- 이번 지원은 북한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이 냉각된 북중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화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음. 이와 관련, 중국은 최근 리진권(李進軍) 주북 중국대사와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 등을 통해 북한 중시 메시지를 피력해 왔음.

■ 중국 관영언론, “악순환 우려” 북한에 도발자제 촉구(9/16,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북한을 향해 ‘과거와 같은 악순환이 될 수 있다.’며 자제를 촉구함.
- 관영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6일 사설을 통해 “북한이 다음 달에 실제로 위성(로켓)을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이 보복 차원에서 제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사람들을 낙담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신문은 “북한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이 있어야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바꾸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지만 이런 도박은 북한에 오랜 외교적 고립과 제재를 초래해 큰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지적하며, 이어 한·미·일 대해서도 “북한의 불안감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과 경제제재를 기본화법으로 삼아 북한의 저항을 억누르려고만 했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냄.

■ 中 단둥서 내달 북중박람회…북한대표단 500명 참가(9/16, 연합뉴스)

- 북한과 중국 간 종합박람회인 ‘제4회 중·조(朝: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이하 북·중 박람회)’가 내달 15~18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열림.
- 16일 중국 현지매체인 요녕일보에 따르면 이번 북·중 박람회에 북한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500명에 달하는 대표단을 파견하며 이 가운데 무역업체 100여 개, 직원 300여 명이 포함됨. 박람회는 두 나라 기업의 상품전람회, 북한문예

공연, 국제음식문화전, 북한미술전, 풍경사진전, 관광협력회의, 무역협력토의 및 투자의향서 체결 등으로 진행되며, 북한의 120개 수출·입 업체와 중국 각지의 2천여 무역업체 및 전문바이어가 참여해 구매 상담을 진행하고 북한시장 진출을 꾀할 예정으로 전해짐.

- 이와 관련, 북·중 박람회 조직위는 “박람회는 지난 2012년 시작된 이래 풍부한 내용과 무역성과에 힘입어 ‘중국 10대 특색전시회’로 선정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며 양국의 무역협력 및 교류, 우의증진에 기여했다고 자평한 바 있음.

■ 북한, 을 들어 화교 100여 명 체포...中 친한기류 보복성(9/18, 연합뉴스)

- 홍콩 시사 주간지 아주주간(亞洲周刊) 최신호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올해 들어 여러 화교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으며 최소 100여 명을 체포했다고 화교 무역상 등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아주주간은 북한이 한국과 가까워진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 내 화교를 숙청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과 선양(瀋陽), 지린(吉林)성 내 북한과 인접한 동남부 일대에 거주하는 중국인 상당수가 북한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와 연락이 끊겼다고 전함. 매체에 따르면 보위부는 수시로 북한 내 화교의 통신을 도·감청하고 있으며 중국 체류 시 언행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짐.
- 한편, 북한 내 화교는 일본강점기 때나 그 이전 한반도에 정착한 중국인과 한국 전쟁 때 한반도에 들어온 중국인, 문화대혁명 시기 북한으로 도주한 중국인 등으로 분류되는데, 한 학자는 “한 국가 내 화교의 지위가 대(對) 중국 관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북한 내 화교의 암담한 처지는 북중 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 왕이, “유엔결의 이행의무 있다.”...‘도발강행’ 북한에 경고(9/19, 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6자 회담 구성원들은 모두 유엔 헌장을 준수할 책임이 있고 유엔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힘.
- 왕 부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다폰위타이(釣魚臺) 국빈관 ‘팡페이위안(芳菲苑)’에서 9·19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열린 북핵 세미나에 참석, 6자 회담 구성원은 모두 유엔 회원국이라며 이같이 말하였음. 또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국은 반도(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며 반도의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 어떤 새로운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이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맞아 새로운 장거리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 등을 시사한 가운데 나온 중국 고위 당국자의 이런 발언들은 직접적인 대북 경고 메시지로 풀이됨. 특히 왕 부장이 ‘유엔 결의’를 언급한 대목은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교도통신, 北, 요코타 메구미 부모 평양방문 日에 타진(9/15, 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인 납북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横田めぐみ)씨 부모를 평양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북한은 작년 여름 이후 ‘메구미씨 부모에게 북한에서 손녀(김은경·메구미가 북한에서 낳은 딸)를 만날 기회를 주겠다.’며 초청 의사를 일본 정부에 누차 전달했다고 교도는 전함.
 - 북한은 메구미가 결혼해 딸을 낳고 우울증을 겪다 1994년 4월 자살했다고 발표한 뒤 2004년 메구미의 것이라고 유골을 일본에 넘겼지만 일본 측은 감정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한편, 메구미의 부모는 메구미가 북한에서 낳은 김은경 씨와 작년 3월 몽골에서 처음 만났음.
- 북한,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에 “재침 야망 묵과 않겠다.”(9/19, 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집단자위권법(안보법제)을 제·개정한 것에 대해 '재침 야망'이라고 반발하며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며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은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 또한, 대변인은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재침 야망에 사로잡혀 전쟁법을 끝끝내 만들어냄으로써 또다시 비참한 전쟁의 참화를 당하게 될 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마. 러·북 관계

- 나진-하산 철도 석탄 운송량 첫 100만 돌파(9/17,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올해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철도를 통한 러시아산 석탄 운송량이 처음으로 100만t을 넘어섰다고 러시아 철도 공사를 인용해 보도함.
 - 이는 북한의 대(對) 중국 무역이 둔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가속화해나가는 것으로 풀이됨. 러시아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북러 국경철도를 통해 운송된 러시아 시베리아산 석탄이 지난달 21일 기준 처음으로 100만t을 돌파함.
 - 앞서 러시아 철도공사는 올해 1~7월 북러 국경철도를 통한 전체 물류 운송량이 88만7천500t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음.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5배 늘어난 수치임.

바. 기타

- 국제인권단체, 중국, 탈북자 보호해야...유엔 압박 필요(9/19, 연합뉴스)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보호하도록 유엔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HRW가 18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탈북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19일 보도했음.
 - HRW는 성명에서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보호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게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그러나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부속 의정서 당사국인데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경제 이주민으로 취급하며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고 HRW는 비판함.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중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자국의 책임을 다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차대통령, 25~28일 뉴욕 유엔개발정상회의·총회 참석(9/16,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28일 유엔 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유엔 총회에는 160여명의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다자외교의 꽃인 유엔외교 무대에서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한 박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다각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만큼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를 위한 박 대통령의 예방외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청와대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선 26일 유엔 개발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부대행사로 우리나라와 유엔개발 계획(UNDP)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주최하는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하며, 같은 날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전해짐.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22일 위안부 기념비 결의안 표결(9/18, 연합뉴스)**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오는 22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기념비 건립을 시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체회의에서 심의·표결기로 함. 만약 이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대도시 중 위안부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됨.
 -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공공안전 및 지역서비스 분과위원회는 17일 오후 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어 에릭 마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심의한 후 이를 시의원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함.
 - 결의안의 명칭은 ‘샌프란시스코 시 겐 카운티가 “위안부들”을 위한 기념물을 설치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분과위원장인 마 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계·중국계·일본계·라틴계·유대계·흑인·백인 등 다양한 인종의 시민들이 나와서 4시간 가까이 걸쳐 찬반 의사를 밝혔다.

나. 한·중 관계

- 한중일 정상회의 실무협의...서울개최 가능성 큰 듯(9/15, 연합뉴스)
 -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한 3국 정부의 부국장급 회의가 15일 오후 서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에서 열림. 3국 차원의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일 정상회담에서 ‘10월 말이나 11월 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의견을 모은 이후 처음 열리는 것임.
 - 3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장소 및 세부 준비사항과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협력사업 발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짐. 또한, 3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0월 말~11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일자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주최국인 우리 측은 회의를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런 방침이 중·일 측에도 전달됐을 것으로 보임.

- 중상무부 전문가, 한중FTA, 中동북 개방형 경제 촉진(9/17,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옛 공업지대인 랴오닝(遼寧)성 등 동북지방 진흥을 꾀하는 가운데 지난 6월 정식 서명된 한·중 FTA가 동북 진흥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17일 주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리광후이(李光輝)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원장은 최근 총영사관 주최 ‘한·중 FTA 발전포럼’에서 “한·중 두 나라의 FTA 타결로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이 향상되고 이는 동북지방의 개방형 경제시스템 수립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한·중 FTA의 정식 서명으로 양국 상호혜택을 베푸는 과정에서 동중 산업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며 이것이 동북3성의 산업구조조정을 빠르게 유도해 산업 경쟁력을 향상 시킨다.”고 설명함.
 -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소장은 “동북의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에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면서 “랴오닝성의 연해경제벨트, 지린(吉林)성의 창지투(창춘-지린-투먼) 개발계획 등 지역발전계획 실현에 한국, 일본 등 주변국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또한, 양 소장은 “동북3성과의 경제협력 강화는 남북경협 및 남·북·중 삼각 경제협력 활성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동북에서 삼각협력이 실현된다면 교착 상태에 있는 단둥(丹東) 황금평 경제특구 개발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전망함.

다. 한·일 관계

- 日 역사학자단체, 아베담화, 조선주권 침해사실 무시(9/14, 연합뉴스)
 -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8월 14일 발표)에 대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사실을 무시했다.”고 비판함. 또한, “담화는 일본이 19세기 구미제국의 식민지가 되는데 대한 위기감 속에서 근대화를 이루고 독립을 지켰다고 하면서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고 대만을 식민지화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함.
 - 더불어 성명은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여성 일반의 전쟁피해 문제를 거론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며 “이런 표현은 ‘위안부’ 문제를 전쟁의 일반적인 문제로 취급해 일본 고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나 다름없다.”고 꼬집음. 또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강제연행, 포로와 일반 시민 학살 등의 구체적 가해 사례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함.
 - 그러면서 성명은 “이번 총리 담화의 기초는 독선적인 역사인식을 관철한 것”이라며 “아베 총리, 더 나아가서는 일본 정부의 불량한 식견을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이라고 일갈함.
- 아베 총리, 한중일 3국 회담 실현될 때 한일 정상회담도 원해(9/14,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함.
 - 아베 총리는 일본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실현될 때는 박근혜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각각 한일·중일 정상회담도 개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함.
 - 아베 총리는 “각각 이웃 나라이므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더욱 전체 조건을 붙이지 말고 개최해야 한다.”며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함.
- 日 언론, 강제동원기록 세계유산추진, 한일관계에 찬물 견제(9/14, 연합뉴스)
 - 한국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것에 관해 일본 언론이 경계심을 드러냄.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4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신청을 결정하면 관계 개선의 기운이 생기고 있는 한국·일본 사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된다.”고 평가했음. 산케이(産經)신문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노역한 일본 산업시설의 세계 유산 등재 후 한국과 일본에 강제성에 관한 인식차가 있었고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관해 “한국은 정용의 강제성을 다시 세계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음.
 - 한편, 한국의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 기록물 33만6천 797건을 문화재청의 ‘2016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기록물 공모’에 예비 후보로 등록함. 문화재청은 다음 달까지 후보를 선정해 내년 3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2017년 6~7월 무렵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임.
- 주일대사, 산케이사장 만나 “‘명성황후 칼럼’ 삭제하라”(9/15, 연합뉴스)
 - 유흥수 주일대사는 15일 구마사카 다카미쓰(熊坂隆光) 산케이신문 사장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을 명성황후에 비유한 산케이 칼럼에 대해 항의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이 밝힘.
 - 유 대사는 문제의 칼럼은 “이웃나라의 황후를 가장 잔혹하게 살해한 역사적 만행에 대해 반성과 참회를 하기는커녕, 스스로 그 사건을 거론했을 뿐 아니라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하는 등 폄하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또 “보도의 자유라는 미명 뒤에 숨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재차 악재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대사관은 소개함.
 - 이에 대해 산케이의 구마사카 사장은 “해당 칼럼은 하나의 ‘논평’으로서 한국 국민을 비방·중상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답하며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한국 측의 요구에 전적으로 응하기는 어렵지만, 대사의 방문 취지와 내용은 편집국 등에 내부적으로 전달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짐.
- 한일, ‘한중일 정상회담’ 앞두고 내일 도쿄서 ‘위안부 9차 협의’(9/17,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제9차 국장급 협의회가 18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힘. 이는 지난 6월11일 도쿄에서 8차 협의회가 개최된 지 3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우리 측에서는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협상 파트너로 나섬.

- 당초 이번 협의는 서울에서 개최될 차례지만 ‘집단지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 이하 안보법안)’의 참의원 통과 문제를 둘러싼 일본 측 국내 사정으로 8차 협의에 이어 다시 도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번 협의는 오는 10월 말~11월 초께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만남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됨. 특히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에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의 결과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자위대 한반도파병 논란…아베 ‘부정’ 불구 법률은 ‘모호’(9/20, 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안보 법안 심의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안보 법안 통과시) 법률상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밀접한 관계국에 한국은 배제되느냐’는 오가와 도시오(小川敏夫)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함.
 -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받은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권리로 즉, 아베의 말은 집단 자위권을 활용해 자위대가 지원에 나설 '제3국'에 한국도 포함된다는 것임. 이어 유사시 한반도 파병 가능성에 대한 후속 질문에 아베는 “안 된다.”고 밝힘. 이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더라도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활동은 원칙적으로 공해상에서의 미군 후방 지원, 미국 군함 보호 등에 국한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해석함.
 - 하지만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상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근거를 질문받자 아베 총리는 모호하게 대답하였고, 아베 총리의 답변에 대해 오가와 의원은 “법률에는 (한반도 파병이) 불가능하다고 쓰여 있지 않다.”고 꼬집었음.
 - 벳쇼 日대사, ‘높은 레벨’ 회담기대…앞을 보고 나아갔으면(9/20, 연합뉴스)
 - 벳쇼 고로(別所浩郎) 주한 일본대사는 20일 한일관계에 대해 “높은 레벨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벳쇼 대사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2015 인(in) 서울’ 개막식 참석 후 연합뉴스 등 일부 기자들에게 “민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일본과 한국이 앞을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면서 이같이 말함.

- 뱃쇼 대사의 ‘높은 레벨’은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됨. 이 같은 언급은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께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고,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中, “남중국해 건설공사는 정당” 美 비판 일축(9/14, 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미스치프 환초(중국명 메이저자오·美濟礁)에서 진행중인 자국의 건설공사에 대해 “합리적이며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미국 측의 비판을 일축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난사(南沙)군도(스프레틀리 군도)’와 부근 해역에 대한 논쟁의 여지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관련 섬과 암초에서 이뤄지는 건설은 합리적, 합법적인 것이며 완전히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함.
 - 이와 관련, 미국 펜타곤과 의회에서는 “인공섬 매립공정을 중단했다.”는 중국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대중 비판론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군함과 항공기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음.
- 백악관, 오바마, 시진핑과 회담서 해킹에 우려 표명할 것(9/15,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 하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주 양국 간 고위급 사이버 안보대화의 결과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중국의 행위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우려를 표명해왔다.”며 “그 행위가 우리의 경제와 국가안보에도 상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솔직히 평가해왔다.”고 설명함.

- 앞서 미국에서 정부 기관과 기업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에 중국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이 의혹이 시 주석의 방문을 앞두고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음. 미국 정부는 해킹에 관여한 중국 기업·개인에 대규모 제재를 가할 계획이지만,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제재 집행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해짐.
- 미국, 중국 북핵 세미나에 미국 관료는 불참(9/16,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9·19 공동성명 발표 10주년을 계기로 오는 1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북핵 세미나에 미국 관료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밝힘.
 - 캐티나 애덤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6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이 6자회담 당사국들을 초청해 북핵 세미나를 연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는 미국 정부와는 상관없는 민간 차원의 행사이며 미국인 비정부 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뿐 미국 정부의 어떤 메시지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설명함.
 - 중국은 9·19 공동성명 발표 8주년이었던 2년 전에도 6자회담 당사국 외교관과 학자들이 참여하는 북핵 세미나를 개최했으나, 이번에는 2년 전과 달리 각국 6자회담 수석대표들의 회의 참석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한국에서는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건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이 세미나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임.
- 오바마-시진핑, 25일 백악관서 미중 정상회담(9/16, 연합뉴스)
 -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난다고 15일 밝힘.
 - AF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22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미·중 인터넷 산업 포럼’ 참석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해 25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오는 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임.
 -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지난 2013년 6월에 이어 국가주석 취임 후 두 번째이며,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만남에서 해킹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은 물론 미중 기후변화 대책, 양자투자협정(BIT), 북핵 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시진핑 방미 앞두고 민주인사 귀위산 석방(9/16, 연합뉴스)
 - 중국은 다음 주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인권 운동가 귀위산(郭玉閃·38)을 전격 석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함.
 - 베이징의 민간 싱크탱크인 환즈싱(傳知行)사회·경제연구소를 창설한 귀위산은 지난 14일 구금 11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자택을 돌아갔다고 VOA는 전함. 사회개혁 운동가이자 인권옹호가인 귀위산은 작년 10월 홍콩의 반(反)중국 민주화 시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공공질서 문란(심혼자사죄·尋衅<다툼>滋事罪) 혐의로 베이징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1월 불법 경영혐의로 정식 구속됨.
 - 이와 관련, 베이징의 유명 인권활동가 후자(胡佳)는 당국이 귀위산을 전격 석방한 것은 시 주석의 방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면서 구속 중인 다른 인권 운동가와 민주 인사들도 석방하라고 촉구함.

- 中, 미-중 정상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협력강화 논의(9/16,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기간인 25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대한 양국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밝힘.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6일 중국 외교부와 공공외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란팅(藍廳)포럼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는데, 시 주석의 첫 국빈 방미 때 미국과 중국 양측이 “한반도 비핵화 추진, 이란 핵문제, 반(反)테러 및 법집행 문제, 아시아태평양 협력 등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의 평화·안정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미중간 상호 협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를 이란 핵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함께 지역의 ‘핫이슈’로 거론하며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함. 왕 부장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개발에 대한 양국 정상의 강력한 반대와 경고성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시진핑, 인권보장에 ‘최선’은 없고 ‘개선’만 있다(9/17, 연합뉴스)
 - 시진핑 주석은 16일 열린 ‘베이징(北京)인권포럼’에 보낸 축사를 통해 “중국은 국정(국가현실)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인권 보장에는 ‘가장 좋은 것(최선)’은 없으며 ‘더 좋은 것(개선)’만이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17일 전함.

- 이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국빈 방미를 앞두고 나온 시 주석의 이 같은 견해는 미국 측의 잦대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중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풀이됨.
 - 한편, 시 주석은 이번 포럼이 세계 반(反) 파시스트 전쟁 승리와 인권 진보를 주제로 열린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 인민이 일본 군국주의의 야만적 침략에 저항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큰 희생과 공헌을 했다.”며 미국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음.
- 시진핑, 중미관계 본질은 호혜공영…전략적 오관 피해야(9/18, 연합뉴스)
- 취임 후 첫 국빈 방미를 앞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측 인사들에게 “중미(미중)관계의 본질은 호혜 공영(윈-윈)”이라며 미국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함.
 - 1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제7회 중미 공상업계 포럼에 참석한 미국 측 대표단과 만나 “양국이 호혜 협력하는 것은 양국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세계 평화, 발전, 번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메시지를 전함. 또한, 그는 “일부 갈등이 있지만 크게 보고 서로의 핵심이익을 존중함으로써 전략적 오관을 피해야 한다.”면서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통제함으로써 공동이익을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말함.
 - 이 같은 메시지는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대중 강경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측을 향해 적극적인 협력과 갈등 관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됨. 한편 신화통신은 시 주석의 방미에 대한 주요 키워드로 ‘전략적 상호신뢰’, ‘경제무역 협력’, ‘갈등 관리’, ‘민의 기초’, ‘책임의 공동부담’ 등을 제시함.
- 시진핑 특사, 美에 링지화 동생 송환 요구(9/18, 연합뉴스)
- 최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공안 총수가 미 정부에 링지화(令計畫)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의 동생 등 일부 비리 혐의자의 송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8일 소식통을 인용, 멩젠주(孟建柱)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지난주 워싱턴에서 이뤄진 미 정부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링 전 부장의 동생 링완청(令完成)과 부동산 개발업자 귀원구이(郭文貴)의 송환을 요구했다고 보도함.

- 몇 서기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보안과 사법, 정보기술(IT) 관리로 구성된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해 제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정부 대표단과 만났다고 신문이 전함. 한편, 미국 측은 회의에서 중국이 범죄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협조하기 어려운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이들의 송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짐.
- 美, 시진핑 방미 앞두고 중국에 도피사범 첫 송환(9/18, 연합뉴스)
 -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자국 경제사범의 신병을 인도받았음.
 -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는 18일 중·미 양국 사법기관과 외교 당국의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14년째 도피행각을 벌인 비리사범 양진권(楊進軍)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힘.
 - 중국이 도피사범을 유럽 국가로부터 송환받은 적은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용의자 신병을 넘겨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간 이번 협력은 중국인 정보요원들의 미국 내 활동을 둘러싸고 미중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됨.
- 中, 미국기업에 ‘보안서약’ 요구…해킹갈등 악화 가능성(9/19,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중국 진출을 꾀하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에 치명적 제약을 줄 수도 있는 일종의 ‘보안서약’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라고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함.
 -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 굴지의 첨단기술 기업들에 기업의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영업 중에 사용한 각종 고객 정보는 중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안서약 요구 서한을 발송했다는 것임.
 -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국가안보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양대 주요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 서한은 최근 중국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보 관련 법안의 내용과 비슷함. 이는 미국 기업의 제품 관련 정보에 제3자(중국정부)가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종 정보와 데이터에 대한 해독 코드나 원시 코드를 중국 정부에 넘기라는 의미라고 이 신문은 풀이함.

- 최초의 '사이버 군축협정' 나올 전망...미·중 협상 박차(9/20, 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평화시 상대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이버 무기 선제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사이버공간 군축'에 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19일 보도함.
 - 신문은 양국 협상이 타결되면 최초의 '사이버공간 군축협정'이 될 것이라고 밝힘. NYT는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사이버공간에 관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발전소나 금융시스템, 무선전화망, 병원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막을 수 있지만 중국이 진원지로 지목되는 미국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침해, 수백만 명의 공무원 인사자료 해킹 등의 사이버 공격은 대부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함.
 - 한편, 협상에 관여하는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양국 정상에 발표할 협정은 주요 인프라 시설의 사이버 공격 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보다는 최근 유엔에서 실무그룹이 채택한 행동지침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시진핑 방미로 美中 경협 분위기 고조...남중국해 문제 해결 기대(9/20,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양국 간 경협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음. 이는 시 주석이 시애틀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도 상호 기대가 높은 경협을 통해 사이버보안,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 양국 간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힘.
 - 20일 중국 중앙(CC)TV는 시 주석의 방미에서 경제무역협력이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상무부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양국 간 경협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함.
 - 양국은 세계 최대 경제체로, 지난해 교역규모는 5천55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또 지난해 말 현재 양국 간 상호 투자규모는 1천200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시 주석의 방미는 양국 간 경협과 상호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바. 미·일 관계

- 日 오키나와지사, 미군기지 신설 승인 취소하겠다(9/14, 연합뉴스)
 -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지사가 자신의 권한을 활용, 현내 미군기지 신설(이전)

- 공사에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아베 정권과의 갈등이 한층 첨예해질 전망이다.
-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沖縄)현 지사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전임 지사 시절 이뤄진 헤노코(邊野古) 연안(미군기지 신설 대상 부지) 매립 승인에 하자가 있었다며 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헤노코 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일본 정부는 매립 승인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불복 조치를 밟을 예정이어서 결국 소송전으로 사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망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하나되어 관계 법령을 따라 주민 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공사를 강행할 뜻을 밝힘.
- **日 집단자위권법 통과에 미·영 ‘미소’…중국은 ‘눈살’(9/19, 연합뉴스)**
- 일본이 해외 무력사용 등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길을 열어주는 집단 자위권법안을 19일 강행처리하자 미국과 영국은 미소를 지은 반면 중국은 눈살을 찌푸렸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법안이 통과된 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힘. 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함.
 -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 안보정책 정비로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냐며 비판함.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어 “국제사회는 일본 측이 전수방위 원칙(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과 전후 줄곧 걸어왔던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고 지적함.

사. 미·러 관계

- 마러 외무 전화통화, 한반도 긴장해소 방안 논의(9/16,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와 미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고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 외무부는 이날 내놓은 언론 보도문에서 “미국 측의 요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간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면서 “통화에서 양측은 시리아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한반도 긴장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외무부는 이어 또 다른 보도문에서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과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역시 미국 측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했으며 양측이 한반도 정세와 북핵 6자회담 재개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함. 한편, 러시아와 미국 측 외무 당국자 간 전화통화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내달 10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루어짐.

- 마러 국방장관 전화통화 시리아 사태 이견 좁히기(9/19, 연합뉴스)
 - 시리아 문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간 이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국방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함.
 -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날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두 장관이 시리아 긴장 해소 방안과 과격 이슬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IS) 격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함. AP통신은 고위급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두 장관은 양국이 어떻게 하면 차질 없이 IS를 격퇴할 수 있을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하였음.
 - 앞서 미 국무성은 18일 러시아에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군 당국자 간 회담을 제안했고, 러시아도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양측의 회담이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관측됨.

아. 중·일 관계

- 中, 日 집단자위권법안 소위 통과에 우려 속 촉각(9/17, 연합뉴스)
 - 중국은 일본 여당이 17일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우려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짐.
 - 중국 관영 언론들은 17일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일본 여당이 야당 의원들과 각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점을 집중 보도함. 관영 신화통신은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들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 총리 및 각료 문책 결의안 등의 방식으로 저항할 것이란 점을 부각시킴.
 - 이와 관련,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에서 아베 정권의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일본 국내의 정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역사적 교훈을 새기기를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음.

- 中, 日집단지위권법 통과에 “평화발전의 길과 배치”(9/19, 연합뉴스)
 - 중국은 일본이 만주침략을 시작한 ‘9·18 만주사변’ 84주년 기념일 다음날인 19일 일본 의회에서 집단자위권법안이 통과되는데 대해 격앙하며 “평화발전의 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의회가 집단자위권법안을 통과 시킨 직후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을 통해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힘.
 - 홍 대변인은 이어 “국제사회는 일본측이 전수방위 원칙(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과 전후 줄곧 걸어왔던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역사적 연유로 인해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동향은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가 크게 주목해온 사안”이라며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 국내외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함.

- 中, 일본군 위안부 기록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9/19, 연합뉴스)
 -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문가인 쑤즈량(蘇智良) 상하이사범대 교수는 19일 난징(南京)대학살 사료와 함께 군 위안부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쑤 교수는 중국 국가당안국(기록물보관소)이 보관하고 있는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 운영, 위안부 강제동원 등을 입증하는 기록을 추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계획이라고 전함. 국가당안국은 이달 초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일 (전승절)을 앞두고 위안부 관련 자료와 일제 전범 자백서를 잇따라 공개한 바 있음.
 - 한편, 쑤 교수는 주한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한국의 위안부 소녀상과 같은 중국의 위안부 소녀상을 판이쥘(潘毅群) 칭화(淸華)대 미술학과 교수가 조각을 맡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임.

자. 중·러 관계

- 중·러 북핵담당 대표 회동, 한반도 정세·전망 논의(9/15,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러시아와 중국 외교부의 북핵 문제 담당 대표들이 14일 (현지시간) 회동해 한반도 사태 등을 논의했다고 밝힘.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언론 보도문을 통해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고리 모르쿨로프 아태지역 담당 외무차관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중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샤오첸(肖千) 외교부 한반도사무 부대표를 만났다고 전했음.
 - 두 인사는 면담에서 한반도 정세 현황과 향후 전망, 동북아 지역 상황 등과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외무부는 소개함. 하지만 면담 결과에 대해선 상세하게 언급되지 않음.
 - 이날 러-중 외교 당국자 간 회동은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이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식으로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져 이와 관련한 양국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음.
- 러시아, '경제 둔화' 중국 의존도 줄이려 한다(9/16, 연합뉴스)
 - 중국과 '신밀월' 관계를 과시해 온 러시아가 경제가 둔화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됨.

-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의 알렉산더 가부예프 러시아·아시아 전문가는 서방국의 경제 제재 여파로 중국의 에너지 수요에 의존해 온 러시아가 계약을 다변화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함. 가부예프는 러시아가 베트남의 해외 에너지 사업과 무기 시장, 핵발전소를 포함한 기반시설 사업에 지분을 갖고 있다며 “러시아가 중국이라는 바구니에 더 많은 달걀을 넣었지만, 남중국해 주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때 러시아 서부 시베리아 천연가스를 중국 서부 지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전해짐.

■ 中 연변주 훈춘, ‘동북아 십자로’ 무역중심지 부상(9/17, 연합뉴스)

- 중국에서 유일하게 북한, 러시아와 접경한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훈춘(琿春)시가 ‘동북아 십자로’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역내 국가들의 상호 무역 중심지로 떠오름.
- 17일 신화망과 길림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훈춘시는 북한, 러시아와 연결되는 4개 국가급 통상구를 확보하고 도시에서 반경 200km 내에 북한 나진항, 러시아 자르비노 항 등 10개의 항구가 있는 점을 활용해 한국 등 동아시아 각국의 화물을 유통시키고 있음.
- 지난 5월 훈춘철도통상구를 통해 러시아산 철가루(鐵粉) 3천100t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들여오는 등 올해 총 50만~100만을 수입할 계획이며 사상 처음으로 러시아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했으며, 지난 6월에는 훈춘(중국)-부산(한국)-자르비노(러시아)를 잇는 3개국 간 철도-해운 연결항로를 통해 첫 쌍방향 운수를 실현함. 이 항로를 통해서도 한국의 컨테이너 화물이 처음 중국-러시아로 수출되기도 함.

차.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인권 행사 왜 못 막았나” 北, 駐인도네시아 대사 해임(9/21, 조선닷컴)
 -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한인권’ 관련 행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이와 맞물려 북한이 주(駐)인도네시아 대사를 전격 교체하는 등 전통적 우방인 북·인도네시아 사이에 균열음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음.
 - 18일 북한인권시민연합 주최로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북한인권 행사는 북한의 방해 공작에 대비해 현지 경찰 3명이 출동한 가운데 진행됐음.
 - 앞서 16~1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 때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행사장에서 탈북자들에게 욕을 하며 “범죄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자꾸 이런 일 벌이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협박을 한 데 따른 것임.
 - 한국대사관의 협조 요청을 받은 인도네시아 경찰은 탈북자 등 행사 관계자들이 반동을 떠날 때까지 밀착 경호를 했음.
 - 북한대사관 관계자들은 경찰을 의식해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19일 북한이 이정률 인도네시아 대사를 해임하고 안광일 신임 대사를 임명했다고 발표하자, 현지 외교가 안팎에서는 “북한 인권 행사를 막지 못한 문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나왔음.
 -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북한 대사관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양국 대학 간 과학·문화 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자축하는 분위기였다”며 “그러나 이후 인도네시아대학 정문에 북한인권 행사 관련 대형 포스터가 나붙고 행사가 크게 열리자 당황해했다”고 했음.
 - 북한 대사관은 행사를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총력전을 벌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했음.
 - 인도네시아는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첫 대북인권결의가 채택된 이래 중국·러시아·쿠바·수단·짐바브웨 등과 함께 한 번도 유엔의 대북결의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임.
 - 1965년에는 김일성이 직접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북한은 이 같은

특수 관계를 고려해 지난해 조코위 대통령이 당선되자 김정은 명의로 친서를 보내 방북 요청을 했음.

-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요청하는 등 양국 관계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음.
- 하지만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마르주키 다루스만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되고, 엘삼(ELSAM) 등 인도네시아 인권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는 등 각계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인도네시아 정부도 더 이상 북한을 두둔하기에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평가임.

■ 로버트 킹 특사 “북한 고사총 동원 공개처형 너무나 잔혹”(9/22, 미국의소리)

- 유엔인권이사회가 21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2시간 40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음.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 이후에도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책임자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 다루스만 보고관은 앞으로 유엔총회에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통해 이런 책임자 규명에 대한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며 지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날 서방 세계의 여러 나라 대표들은 북한에서 계속되는 반인도적 범죄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음.
- 미국 대표로 발언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잔혹한 행위들은 끔찍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고사총을 동원한 처형 문제를 지적했음.
- 최근 몇 년 동안 공정한 재판 없이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처형이 빈번해 졌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탈북민들의 보고서와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은 이들에 대한 공개 처형에 대공화기인 고사총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임.
- 앞서 한국 국정원은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과 일부 군 간부들이 총살된 게 확인됐다고 국회에 보고했으며 민간단체들은 위성사진을 통해 처형에 고사총이 동원됐다고 밝혔음.

- 킹 특사는 이어 정치범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미 정부는 특히 최근 특정 수용소 내 수감자들이 대거 사라졌다는 보고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북한 15호 요덕 관리소 등 수용소들에게 많은 수감자들이 사라졌다는 보고들이 있는 만큼 북한 정부가 이들의 소재를 밝히고 수용소들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것임.
 - 하지만 북한 대표로 발언한 최명남 제네바 주재 차석대사는 이날 토론이 미국이 주도하는 적대주의 정책과 정치적 음모의 산물로 단호히 배격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 했음.
 - 최 차석대사는 유엔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잘못된 정보들의 산물이라며 북한 정부는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거부한다면 특별보고관과 인권 관련 국제대표들을 북한으로 초청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킹 특사는 미국은 오히려 북한 인권 피해자들과의 대화를 주선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 유엔 “북한, 세계 유일의 인터넷 불허국”(9/24, 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네스코(UNESCO)가 이번 주 공개한 ‘2015브로드밴드 현황보고서(The State of Broadband 2015)’는 전 세계에서 북한만이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 전 세계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공동 노력(MDGs)의 일환으로 2010년 구성된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매년 세계 각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과 이용 현황을 정리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 북한은 ‘전체 인구 중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의 비율’과 관련한 국가별 순위에서 꼴찌로 평가됐음.
 - 전체 조사 대상 144개 국 중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0%로 조사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함.
 - 북한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가구 수 비율, 고속인터넷 즉 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인구 비율 등의 조사에서도 최하위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음.

- 하지만 손전화를 보유한 북한 주민 열 명 중 한 명이 영상 통화 등 정보의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른 일명 제3세대 정보기술, 즉 3G전화기를 가지고 있어서 ‘브로드밴드 접속이 가능한 이동전화 보급율’로는 전체 대상 189개국 중 132위로 평가 받았음.
- 고속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는 있지만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금지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 때문에 세계 유일의 ‘인터넷 사용 주민 0%’ 국가로 남아 있다는 평가임.
- 보고서는 북한을 비롯한 42개국이 브로드밴드 육성이나 보급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음.
- 보고서는 브로드밴드 육성 계획을 통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148개국이 디지털 혁명의 혜택을 봤다면 브로드밴드 육성 계획의 도입을 촉구했음.

■ 북한, 유엔 북한인권토론회 맹비난…“제도전복 모략”(9/24, 연합뉴스)

-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북한인권 전문가 토론회를 “인권을 구실로 우리의 제도 전복을 노린 불순한 정치적 모략극”이라며 맹비난했음.
- 북한 외무성은 2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적대 세력들이 유엔 인권 무대를 반공화국 인권 모략 마당으로 악용하면서 국제적 압박 공조를 합리화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이번 북한인권 전문가 토론회는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공식 일정 가운데 하나로 열렸음.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부대 행사가 아닌 본회기 내 공식 일정으로 북한인권 토론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대변인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에 맞장구치면서 특정한 나라를 겨냥한 압박 공간으로 이용”됐으며 “공정성과 엄정 중립의 원칙에 의혹과 우려”를 표시했음.
- 또 토론회에서 “동맹 관계를 위해서라면 특정한 나라의 주권 침해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에 편승하는 일본과 EU 나라들의 치졸한 모습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토론회를 “반공화국 인권 캠페니아(캠페인)”, “참을 수 없는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진정한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바라지만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노린 대화와 협력은 견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대변인은 “누가 뭐라든 우리 인민의 삶과 행복의 터전인 우리식 사회주의 체도를 고수하고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라며 “적대 세력들의 인권 소동에 끝까지 강경 대처해 나갈 의지를 더욱 가다듬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앞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도 이번 토론회에 “불순한 정치적 동기가 깔려 있다”며 “미국은 유엔 무대를 악용해 우리 제도 전복을 노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음.

■ 외통위, 개성공단 방문 무산…“북한인권법 문제 삼아”(9/24,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성공단을 방문하려 했으나 북한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24일 전해졌음.
- 외통위는 국정감사 중인 오는 10월5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우리 업체의 시설 가동 현황과 북측 근로자의 근무 환경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북한이 23일 최종 반대 의사를 전달했음.
- 외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장 방문 계획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방문을 타진했지만 23일 북한이 통일부를 통해 불허 입장을 전해왔다”면서 “북한은 외통위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획하기 때문에 외통위의 방북을 거부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됨.
- 당초 외통위는 금강산 관광지의 현장 시찰도 추진했으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시설이 낡아 안전상의 위험 등을 들어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 북, 어린이들 뇌수막염으로 고통(9/2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대도시 어린이들 속에서 결핵성 뇌수막염이 크게 유행한 건 올해 7월부터 8월 사이임.

- 당시 소식통들은 북한당국이 결핵성 뇌수막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까지 했다고 이야기했음.
- 그나마 북한당국의 발 빠른 대응조치로 어린이들 속에서 나타난 결핵성 뇌수막염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지만 일단 이 병에 걸린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높았고 그나마 살아남은 어린이들도 지금까지 완치되지 않아 신음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한 목소리를 냈음.
- 22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에 청진시와 함흥시, 평성시를 비롯한 큰 도시의 어린이들 속에서 나타났던 원인모를 질병은 중앙의 조사결과 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음.
- 소아병원들에서 결핵성 뇌수막염을 제때에 진단을 내리지 못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많은 어린이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그는 덧붙였다.
- 결핵성 뇌수막염 확산으로 북한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사이 탁아소와 유치원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 결핵성 뇌수막염은 7세미만의 어린이들, 그중에서도 주로 4세 이하의 어린이들 속에서 나타났다고 그는 말했음.
- 7세미만 어린이들이 결핵성 뇌수막염을 앓은 것은 북한에서 결핵예방 접종을 7살 이상부터 실시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그는 추측했음.
- 이와 관련 25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결핵성 뇌수막염을 앓던 어린이들이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후유증이 심각한데 약값이 너무 비싸 치료를 포기하는 부모들도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 북한의 소아병원들이 진단을 제때에 내리지 못한 것은 병원의 낙후한 시설과 의료수준 때문도 있지만 결핵성 뇌수막염은 전염병이 아닌 원인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 하지만 이번에 유행한 결핵성 뇌수막염은 급속한 확산속도를 보여 북한 보건당국이 발 빠르게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 사망률이 높은 결핵성 뇌수막염은 순천과 라남제약에서 만든 ‘마이싱’이 유일한 치료제였는데 20mg짜리 포장의 2백만 단위 마이싱 한 병 값은 장마당과 약국에서 북한 돈 4천원으로 상당히 비쌌다고 그는 지적했다.
- 소식통들은 “병을 앓았던 어린이들 속에서 사지가 마비되는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며 “치료제는 항생제인 신토미핀과 결핵약인 ‘도프’인데 10알 포장의 ‘신토미핀’ 한통은 북한 돈 4천원, 6개월분의 ‘도프’는 북한 돈 40만원”으로 매우 비싸다고 강조했다.

- 미국 정부, 전 세계 여성 정치범 석방촉구...북한사례 집중소개(9/25, 미국의소리)
 - 24일 미국 정부의 국제 인권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웹사이트(www.humanrights.gov)에 북한 여성 정치범들의 사례가 소개됐음.
 - 미국 정부가 9월 한 달 간 진행하는 세계 여성 정치범 20 명 석방 촉구 캠페인의 일환임.
 - 해당 웹사이트와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사회연결망 서비스 등에는 9월 한 달 동안 주 중에 매일 한 명씩 20명 여성 정치범들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음.
 - 하지만 다른 19 명 여성 정치범들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것과는 달리 북한의 여성 정치범은 한 명으로 특정되지 않았음.
 - 사만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수용소 체제는 옛 소련의 강제수용소인 굴라그에 비견될 정도”라며 “정치범 석방 캠페인을 전개할 때 북한을 빼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음.
 - 파워 대사는 하지만 특정한 북한인 여성 정치범을 선정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음.
 - 미국이 특정 인물을 선정하면 그 인물의 삶은 심각한 위협에 빠질 것이고, 그에게 어떠한 득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는 모든 여성 정치범을 총체적으로 지목하기로 했다는 설명임.
 - 24일 미국 정부의 인권 웹사이트에는 여성의 형체를 검은색으로 표현한 그림만 올라왔고, 그 아래 ‘북한 정치범’이라는 설명이 달렸음.
 - 웹사이트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이 넘는 남성, 여성, 어린이가 수감돼 있다고 지적했음.
 - 또 북한의 잔혹한 수용소에서는 기아와 강제노동, 처형, 강간, 성폭력, 강제낙태, 고문이 흔히 일어난다고 덧붙였다.
 - 웹사이트는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이유로 화폐개혁 비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얼굴이 들어간 신문 위에 앉는 행위, 김일성의 정규교육 부족을 언급하는 행위, 김 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고 지적했음.
 - 이에 더해 일부는 특정 인물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좌제로 수용소에 끌려간다고 덧붙였다.
 - 웹사이트는 특히 탈북자 김영순 씨와 그의 가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 성혜림 씨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고 소개했음.
 - 그러면서 김영순 씨는 수용소에서 10년의 잔인한 시간을 견뎠지만 부모는 수용소에서 사망했고, 김 씨는 마침내 석방된 뒤 2003년 탈북해 한국에 정착했다고 전했다.

- 북, 추석 맞아 불법휴대폰 단속강화(9/25, 자유아시아방송)
 - “추석 때만 되면 보위부가 중국 손전화 사용자를 잡아내려고 엄청나게 걸쳐댁니다” 최근 량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이렇게 말했음.
 - 조상의 묘에 성묘하러 가는 사람들이 중국 손전화가 잘 터지는 높은 곳에서 전화연계를 갖기 위해 손 전화기를 숨겨 가지고 성묘 길에 나서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하려는 보안원과 보위원들의 발길도 함께 바빠진다는 것임.
 - 평소 방해전파 때문에 중국이나 아랫동네(남한)와 전화연계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은 조상의 묘가 있는 산에는 방해전파가 없기 때문에 성묘 길에 전화통화를 시도하게 된다는 얘기임.
 - “이 같은 사실을 눈치 챈 보안원들과 성묘객들이 서로 쫓고 쫓기는 웃지 못할 숨바꼭질이 해마다 이맘때쯤 벌어진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 그러면서 소식통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 평소엔 도시 주변에서 운용하는 불법(중국)휴대폰 탐지기가 추석 즈음엔 성묘객이 많은 도시외곽의 산악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덧붙였다.
 - 하지만 주민들의 성묘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제한적인 손전화 탐지기로는 성묘객의 불법전화 사용여부를 가려낼 수 없어 주민들과 보안요원들 간의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이 게임에서는 언제나 주민들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소식통은 주장했다.
 - 이와 관련 량강도 출신의 탈북자 이모 씨는 “북한의 성묘객들은 모든 초소에서 평소보다 훨씬 철저한 몸수색을 받아야 하고 함께 가지고 있는 제사음식 바구니도 샅샅이 뒤진다”고 증언했음.
 - 이 씨는 또 “추석 때가 되면 보안요원들의 불법 휴대폰 단속이 주로 묘지가 있는 산간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산 아래의 도시 외곽지역이 보다 안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 북한에서도 추석은 민속명절 휴식일로 지정되어 있어 공무원들 대부분이 휴무에 들어가지만 불법 손전화 단속을 해야 하는 국경지역의 보안요원들은 평소보다 더 고달픈 하루를 보내게 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北, 비판 우려 수해 사망자 축소…40명 아닌 400여명” (9/29,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지난달 수해로 인해 함경북도 나선특별시 주민 4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10배에 달하는 4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음.

- 수해로 인한 사망자가 많을 경우, 김정은 체제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일 것을 우려해 북한이 축소해 발표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음.
- 북한 정보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이번 수해피해는 나선시에 있는 선봉지구 이외에 다른 곳엔 없었다”면서 “선봉지구에만 많은 비가 내렸는데, 북한 당국이 수해로 인한 사망자가 40명으로 밝혔지만 확인한 바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4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당시 수해 피해 관련 노동신문을 보면 새롭게 건물이 건설되는 광경이 나왔는데, 몇 개 마을이 쓸려 갈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면서 “마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엄청나게 컸다”고 덧붙였다.
- 북한이 사망자 숫자를 축소 발표한 이유에 대해 그는 “선진국에서도 수해로 인해 수십 명이 죽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수천 명이 죽었다고 하면 김정은 체제의 수해 대비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면서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북한이 이번에 400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면 자연재해 대비가 거의 없는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2. 북한인권

- 독일의회, 강제노역 등 북 인권 청문회(9/22,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의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사회당 (CDU/CSU) 연합의 슈테판 헤크(Stefan Heck)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인권위원회’가 23일 독일 의회에서 공식 발족행사를 개최함.
 - 노예와 같은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 문제, 북한 수용소 내 강제 노역, 북한의 핵 위협(North Korea 2015: slave laborers abroad, forced labor camps in Germany and nuclear threat to South-East Asia)을 주제로 한 행사임.
 - 이 당의 아놀드 파츠(Arnold Vaatz) 인권 및 인도주의 지원 담당 원내 부대표가 초대돼 개막인사를 하고, 이어 쿠웨이트 건설 노동자 출신 탈북자 림일 씨와 북한정치범수용소 간수 출신 탈북자 안명철 NK위치 대표 등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해 증언할 예정임.
 -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인권단체 ‘국제인권사회(IGFM: International Society for Human Rights)’의 마틴 레센틴(Martin Lessenthin) 이사장도 북한의 인권 실태에 관해 발표함.

- 한편, 익명을 요구한 독일의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집권 여당의 의원이 참여한 ‘북한인권위원회’의 설립을 계기로 독일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에 촉매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앞서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가 21일 개최한 북한인권 전문가 토론회에서 독일 대표는 매우 강력하게 북한의 인권 실태를 비난했음.
 - 북한의 강제실종과 납치 문제 등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독일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북한의 심각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해 독일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북한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가족을 집단으로 처벌하는 ‘연좌제’와 정치범수용소 첩폐를 비롯해 고문과 처형 그리고 강제노역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 “대북투자 통해 북 인권 개선 꾀해야”(9/22, 자유아시아방송)
- 유럽북한인권협회의 마이클 글렌딩 회장은 “유럽 등의 외국 사업가나 투자자들이 북한에서 사업을 할 때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 환경 등 인권 보장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그는 이어 “북한에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 처우 등에 대한 인권 관련 부분에 대해 타협하지 말고, 이러한 인권 조항이 보장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사될 수 없다는 식으로 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 협회는 직접 오는 10월 4일 스코틀랜드의 ‘아시아 스코틀랜드 연구소’와 함께 ‘북한에서의 사업’이라는 제목의 학술회의를 연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글렌딩 회장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대북 사업의 장, 단점에서부터, 대북 투자가 북한인권 개선에 끼치는 영향까지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음.
 - 이 학술회의에서는 유럽북한인권협회의 글렌딩 회장, 장진성 네덜란드 라이덴대학 교수, 아시아 스코틀랜드 연구원 등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나와 연설을 하고, 이어 전문가 그룹 토론, 그리고 참석자 질의응답 시간도 펼칠 예정임.
 - 글렌딩 회장은 이 밖에도 “대북 투자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을 꾀할 때에 북한 당국과 주민들을 따로 (분리해서) 대하는 일명 ‘분리 개입’(separative engagement)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시 말해, 대북 투자 또는 사업을 진행할 때 북한 주민들과의 계속되는 접촉과 개입을 통해 인간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인권에 대해 인식을 강화하고, 개선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등 인권 개선을 다양하게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임.
- 외국인유학생단체, 서울서 ‘북한인권 개선 캠페인’(9/23, 연합뉴스)
 - 주한외국인유학생연합(ISAK)은 23~24일 탈북 대학생들과 함께 서울 중구 정동과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북한인권 개선 캠페인’을 진행함.
 -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30여 명의 ISAK 소속 유학생들은 이틀간 북한 인권 사진전, 탈북 대학생과의 간담회 등을 열고 시민에게 북한의 인권상황과 외국인 납치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호소함.
 - ISAK 관계자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의 아픔에 공감했다”며 “북한 주민들이 인권 유린 속에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 개선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음.
-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장 “북한 인권상황 매우 심각”(9/24, 연합뉴스)
 -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감시하는 유엔 북한인권서울사무소의 시나 폴슨 초대 소장은 24일 연합뉴스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여 필요성을 역설했음.
 - 김정은 정권 들어 인권유린이 더 심각해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반인권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면서 “관련 실태와 자료를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음.
 - 그녀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직접 듣거나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통해 수많은 북한의 반인권적 실태를 접해왔음.
 - 그녀는 그들의 사연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감동적이었다”면서 “그것들은 커다란 사진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비유를 들며 소감을 나타냈음.
 - 북한에는 도시 4개 정도 규모의 정치범 수용소가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곳에 수용돼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을 목격하는 8만~12만 명의 수감자들은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음.
 - 그녀는 북한을 직접 방문해 인권 유린 실태를 수집할 수가 없는 상황임.
 - 이에 대해 그녀는 “탈북자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모으고 있다”고 자신했음.

- 예를 들어, 유엔 총회가 올해 초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채택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역시 탈북자 200여 명을 인터뷰하는 등 심층적인 검증 작업을 거쳐 탄생한 것임.
 - 지난달 한국에 들어온 그녀는 최근 남북한 교류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음.
 - 그녀는 “최근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합의를 환영한다”면서 “이 행사가 인권 위반에 시사 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음.
- 북한, ‘북한인권법안 제정 추진’ 연일 비난 공세(9/25,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여야가 일부 합의안 북한인권법안에 대해 ‘반통일악법’, ‘동족대결법’이라며 연일 비난 공세를 퍼고 있음.
 -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는 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국회에서 감행되고 있는 북인권법은 북남관계를 또다시 악화와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통일악법”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대변인은 이어 북한인권법안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부정하고 동족간의 반목과 질시, 대결과 충돌만을 불러오게 될 동족대결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음.
 - 나아가 “우리의 사상과 체제를 부정하는 북인권법은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며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음.
 -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자들과 여야는 “온 겨레의 염원과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반공화국 대결악법인 북인권법 조작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촉구했음.
 - 앞서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도 24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한인권법안에 합의한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음.
 - 조선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애초에 인권에 대해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 생존권을 가혹하게 유린말살하는 반인민적 악법들만을 조작해내는데 피눈이 되어 있다”고 혈똥었음.
 - 이어 야당에 대해서도 “반통일세력과 야합하면서 민심을 등질 것이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며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음.
 - 북한은 또 최근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와 북한 적십자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등을 잇따라 내세워 대변인 담화를 내고 북한인권법안의 제정 추진을 강력 비난해왔음.

- 노벨평화상 에스키벨 “북한 수교국이 인권 개선 도와야”(9/25, 연합뉴스)
 - 아르헨티나의 인권 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돌포 페레스 에스키벨이 통일을 위한 첫번째 단계는 북한의 인권 개선이고,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이 이를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음.
 - 에스키벨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이 운영하는 ‘평화와 정의의 재단’ 홈페이지에 '북한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이러한 내용의 칼럼을 실었다고 이북5도민 아르헨티나연합회가 24일 전했다.
 - 에스키벨은 “오랫동안 긴장 속에 있었던 한민족은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 유엔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 당국은 유엔 결의안을 존중하지 않을뿐더러 구금과 고문,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의 행위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에스키벨은 지적했다.
 -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이 주민의 삶과 자유를 존중하도록 하는 사법적 장치나 제재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 등 북한과 교역하고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가 나서도록 하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에스키벨은 강조했다.
 - 에스키벨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상에 대한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북한의 동맹국들이 북한의 인권 정책에 대해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음.
 - 미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북한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협력하는 국가들은 남북한이 갈등을 해결하고 통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에스키벨은 설명했다.

- 박대통령, '평화' 30차례 최다 언급...인권·개발·북한順(9/29,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기조연설을 했음.
 - 박 대통령은 브라질, 미국, 폴란드, 중국, 요르단, 러시아 정상에 이어 7번째로 연단에 올랐음.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하늘색 정장 상의 차림으로 총회장에 입장한 박 대통령은 연단 옆 의자에 앉아 잠시 대기했으며, 의장석의 소개가 끝난 뒤 곧바로 연단에 올랐음.

- 이어 유엔 창설 70주년 축하에 이어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 번영, 인권수호를 위한 유엔의 역할에 대한 평가,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 북핵 해결 필요성, 북한 추가도발 비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북한인권 개선 촉구, 한반도 평화통일 당위성 강조 등의 순으로 약 23분 동안 연설을 진행했음.
- 지난해 제69차 총회에서 이미 기조연설을 한터라 종종 미소를 띠었으며, 연설 도중 마이크 위치를 바로잡고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손으로 제스처를 쓰는 등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이었음.
- 특히 ▲강한 유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소녀를 위한 보다 나은 삶' 구상을 통한 5년간 2억달러 개도국 지원 계획을 밝힌 대목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 상처 치유를 촉구한 발언을 했을 때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강조했을 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유엔 지원을 부탁한 대목 등 5차례 장면에서는 박수가 터졌음.
- 박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평화'로 모두 30차례 언급됐다.
- 또한 인권(17차례), 개발(16차례), 북한(14차례), 안보(13차례), 한반도(8차례), 통일(5차례), 도발(4차례) 등으로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자 한 주제에 맞춰 단어 사용 빈도가 달라졌음.
- 박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 대표부 자리에는 2명의 인사가 앉아 있었고, 이 가운데 한 명은 박 대통령의 연설을 주의 깊게 듣는 모습이었음.
- 박 대통령의 연설을 중계한 TV 화면상으로는 지난해 북한 대표부 자리에 앉아 박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들었던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보이지 않았음.

3. 탈북자

- 경기도, 탈북여성 성 인지력·인권 교육…전국 첫 사례(9/21, 연합뉴스)
 - 경기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1일 탈북여성 성 인지력·인권 의식 교육을 시작했다.
 - 도 관계자는 “북한 이탈여성은 탈북 과정에서 생긴 심리적·육체적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해 행복한 삶을 주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개강식은 이날 포천시 천보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렸다. 교육은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탈북여성 105명이 참가함.

- 탈북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양성평등, 가족교육 등을 주제로 하며 지역 여성인권기관 방문 등 현장 교육도 병행됨.
- 앞서 도는 탈북 여성 성 인지 교육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 65명의 강사를 배출했음.

■ 세계 20개 도시에서 ‘탈북 난민 구출의 날’ 행사(9/24, 미국의소리)

-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자유연합과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가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 행사를 개최함.
- 두 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세계 20여 개 도시의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지를 촉구하는 시위와 촛불기도회 등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음.
- 북한인권 단체들이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정한 24일은 중국이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날임.
- 북한자유연합은 중국 당국에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난 2011년부터 9월24일을 탈북 난민 구출의 날로 지정해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행사를 열고 있음.
- 두 단체는 끔찍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비인간적 처우를 받는 탈북 난민들의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게 행사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 이 행사의 공동의장인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의장과 ICNK의 잭 랜들러 씨는 성명에서 행사를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돌보고 중국 정부에 탈북 난민들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며, 이 사안이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깨닫도록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솔티 의장은 특히 탈북 난민들은 다른 난민들과 달리 한국인으로 인정돼 바로 정착할 수 있는 한국이 있다며, 중국이 계속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처우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두 단체 회원들은 행사에서 탈북 난민 보호를 호소하는 청원서와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과거 중국 당국에 보낸 서한을 중국 외교공관들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제네바주재 중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탈북 난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잔인한 처우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음.

- 미 북한자유연합, 중국에 탈북자 복송중단 촉구(9/25, 연합뉴스)
 - 탈북자 구호와 북한인권 개선활동 등을 해온 미국의 시민단체 북한자유연합(NKFC)이 중국 정부에 탈북자 복송 중단을 촉구했음.
 - NKFC의 수재 솔티 대표를 비롯한 10여 명의 인권운동가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중국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음.
 - 이들은 ‘탈북자들을 죽이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음.
 - 솔티 대표는 “탈북자 문제가 여전히 많은 사람의 관심사이고, 중국도 탈북자 인권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중국대사관 앞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으로 보낸 탈북자 복송 중단 요구 서한을 주미 중국대사관에 전달했음.

4. 이산가족

- 前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北 이산가족 상봉자 추천선발 잔인”(9/21, 연합뉴스)
 - 마이클 컰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은 북한이 로또 식으로 이산가족 상봉자를 추천으로 선발하는 것은 “지극히 잔인한 짓”이라고 비난했음.
 - 컰비 전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지금처럼 남북 100명씩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얻는다면 대다수 이산가족이 상봉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눈을 감을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음.
 - 그는 “이산가족들에게 상봉 기회를 주지 않는 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는 희망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남북한은 내달 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남북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함.

- 한국 이산가족 임진각 합동 차례…“생사 확인, 상봉 정례화 이뤄져야”(9/29, 미국의소리)
 - 추석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이 임진각 망배단에 차례상을 마련했음.
 - 정성껏 준비한 햇과일과 음식을 차려놓고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을 떠올리며 절을 올림.
 - 46년 동안 해마다 열린 합동 차례지만 이산가족들에게 올해는 그 의미가 남다른데, 분단 7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 꿈에 그리던 이산가족 상봉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있기 때문임.
 - 이산가족들은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어렵게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음.
 - 현재 한국에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6만 6천여 명. 이들의 81%는 70살이 넘는 고령으로 해마다 4천여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음.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산가족 합동 차례에서 적십자 본회담이 열리면 상봉 정례화와 전면적인 생사확인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음.

5. 남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쌀 40만톤 대북지원해야”…쌀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9/24, 머니투데이)
 - 쌀값 폭락을 막고 북한의 식량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실시하라는 내용의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음.
 -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규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쌀 대북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국내 쌀 40만 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할 것을 요구했음.

- 최 의원은 지난 4월 대정부질문 때도 총리를 상대로 쌀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당시 정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에 정부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해당 결의안을 발의했음.
 - 결의안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 구호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동북아 화해분위기 조성 △쌀값 안정을 통한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발동 억제 △쌀 보관비용 절감 △차관형태의 지원을 통한 남북경제공동협력 추진 △통일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음.
 -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은 7월 기준 139만 3000톤에 이르며, 매년 관리비용만 수 천 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쌀 재고량 과다로 인한 쌀값하락으로 농민들의 실질소득까지 감소하고 있음.
 -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40만 톤의 쌀을 북한에 지원했을 경우 쌀(80kg) 1가마당 7000~8000원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음.
 - 이에 따라 쌀 40만톤을 대북지원할 경우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변동직불금으로 인한 세금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임.
 - 최 의원은 “현재 농협 및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 창고에도 쌀 재고가 넘쳐나 2015년산 신곡 매입을 꺼리는 가운데 올해도 지난해처럼 풍년이 예상되고 있어 수확기 쌀 가격의 폭락이 예상된다”며 “(대북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쌀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지고 생명산업인 쌀 산업의 붕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 이어 그는 “우리 농민들의 피땀이 헛되지 않게 하고, 기근으로 힘들어 하는 북한 동포들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쌀 대북 지원”이라며 “대북 쌀 지원은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통일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독NGO “북에 소아외과술 전수”(9/28, 자유아시아방송)
- 독일의 민간단체 캡 아나무르(Cap Anamur)의 관계자는 내년 북한에서의 사업을 위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한다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특히 내년 주요 사업으로 독일 하노버대학 의과대학의 저명한 소아외과팀이 북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기술을 전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독일 하노버대학에서 추진하던 북한 의사들이 독일로 가서 훈련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독일 의료법상 북한 의사가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는 제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이 단체는 더 많은 북한 의사를 대상으로 수술법을 전수하기 위해 독일 의사가 북한으로 가서 수술 시범을 보이고 북한 의사가 실습도 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것임.
- 하노버대학의 마틴 라커(Martin Lacher) 박사는 캡 아나무르가 추진하는 의료 기술 훈련을 위해 사전 답사 형식으로 지난 봄 북한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 라커 박사는 향문이 없거나 식도와 위가 연결되지 않은 신생아 기형 등을 조기 진단하는 법, 신생아 마취와 수술 후 중환자실 치료 등에 대한 기술과 시설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어른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맹장염 등의 수술은 북한에서도 가능하지만 신생아에게 볼 수 있는 생명과 관련한 기형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외과적 기술은 충분하지 않아 신생아가 사망하게 된다는 것임.
- 라커 박사는 그러면서 북한을 방문해 이 같은 분야의 기술을 전수하고 신생아 등 어린이용 외과 수술에 필요한 의료 기기 지원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특히 2013년 건립된 옥류아동병원에는 X선 등의 의료 기기가 도입돼 있지만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그는 말했다.

8. 북한동향

- 【남조선인권대책협회 대변인 담화(9.21)】 우리 국회의 ‘北인권법’ 제정 움직임 관련 ‘북남사이의 화해와 평화의 흐름을 차단하고 파소폭압통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공공연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우리(北)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9.21,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인권실태 폭로(백인경찰의 흑인사살 등 총기류 범죄사건) 및 “미국이아말로 세계 최악의 인권폐허지대, 인권말살국”이라며 ‘미국의 인권보고서 발간 등 인권재판관 행세 비난(9.22, 중앙통신·노동신문·어지러운 제 집안문제부터 바로잡으라)

- 【『북적』중앙위 대변인 담화(9.23)】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관련 ‘북남 사이의 화해와 완화의 흐름을 대결에로 되돌려 세워보려는 노골적인 도발이며 민족의 통일지향에 대한 전면적 도전행위’라고 비난(9.23, 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9.23)] ‘북인권법 조작으로 동족대결이 법적으로 고착된다면 관계개선의 분위기는 삼시에 돌변하게 될 것이며 극도의 대결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인권법 조작책동 중단’ 촉구(9.23, 중앙통신/북인권법 조작은 북남관계발전에 백해무익하다)
 - * ‘南 보수세력의 북인권법 조작책동은 우리(北) 제도·주권·존엄에 대한 공식적인 전면부정이며 체제대결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남합의를 완전히 뒤집어엎고 대결에로 더욱더 몰아가기 위한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동’이라고 지속 비난(9.23, 평양방송/북남관계를 대결에로 몰아가는 용납 못할 도발행위)

-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 대변인 담화(9.24)】 우리 국회의 ‘北인권법’ 제정 움직임 관련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로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며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보다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라고 위협(9.24, 중앙방송·중앙통신)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